

전국금속노동조합 61차 정기대의원대회

2026.3.3.(화) 금속노조 교

업종별 공동투쟁!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조직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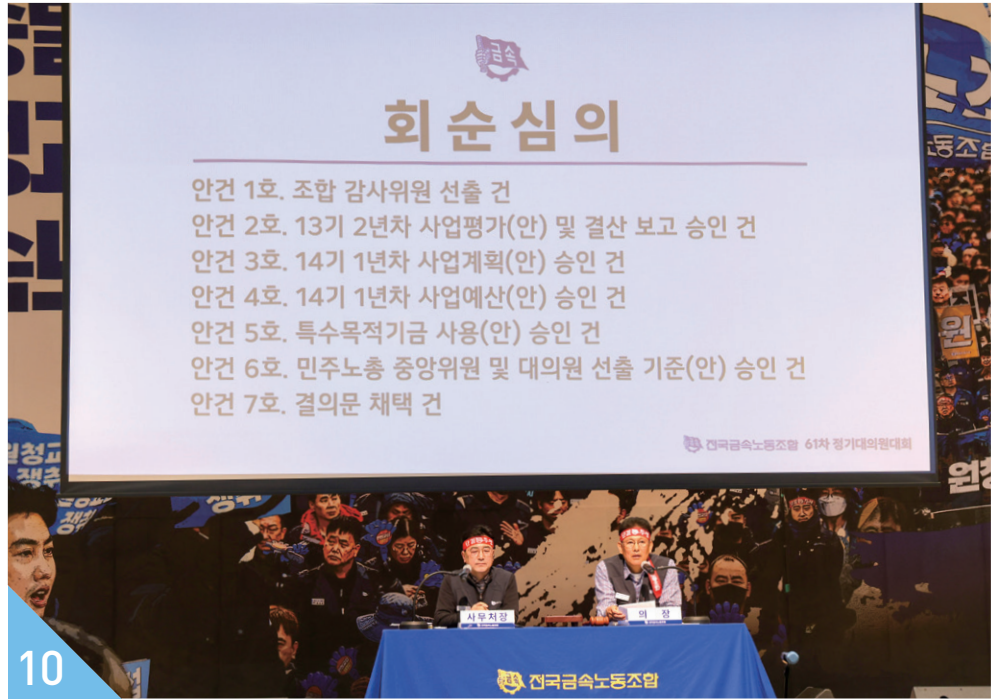


표지 이야기 2026년 사업계획·요구안 해설
자동차산업 2028년 이후를 위한 노동의 문법

현장은 지금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6.3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표지 이야기

금속노조가 3월 3일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업종별 공동투쟁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원청교섭, 금속노조 조직혁신 등 '202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10

02 한다면 한다

같이, 그림

03 우리 노동에도 봄이 올 거야

현장은 지금

04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06 한국지엠 직영정비 전면 폐쇄 철회 투쟁

표지 이야기

10 금속노조 2026년 사업계획 해설

14 금속노조 2026년 요구안 해설

제조업 이슈

20 자동차산업_ 2028년 이후 노동의 문법

25 조선산업_ 조선업체의 해외 투자 배경과 과제

30 철강산업_ 한국 철강기업의 변화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와 함께

34 함께 만들어 나갈 원청교섭 첫 해

36 2026년 노동안전보건사업계획 해설

정책과 법률

38 2010년대 노조 파괴의 함의와 현재성

42 2026년 바뀌는 노동법제도

찰각, 금속노조

46 1월부터 3월까지 금속노조 이모저모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기획·편집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홈페이지 www.ilabor.org
페이스북 koreametal
인스타그램 metalunion1
텔레그램 kmwunews
전자우편 edit@ilabor.org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5 6층 (우)04518
대표전화 (02) 2670-9555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온라인 금속노동자 ilabor



금속노동자 PDF 바로가기

에너지 체제 전환

50 실용주의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인터내셔널

54 헝가리 삼성SDI 노동조합 출범

6.3 지방선거

- 56 노동당_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선거
- 58 녹색당_ 숨통이 트이는 녹색정치
- 60 정의당_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을 향해
- 62 진보당_ 노동자가 주인 되는 지방 정부

세상 읽기

64 낡고 썩은 위험적 정치제도, 갈아엎는 수밖에

땡스북스

66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다_ 전주 '책방 토닥토닥'

노래가 필요한 세상

68 예람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그런 말은

70 외눈박이·깜깜이? 보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착각

현장을 울리는 사람들

72 한국지엠지부 노래패 '참소리'

여기, 금속노조

76 대전충북지부 H그린파워지회

2026년 투쟁 깃발을 올리다

수출 주도 성장은 끝났고 국내 설비투자도 멈췄습니다. 자본은 산업 기반까지 해외로 내보냅니다. 자동화·디지털화와 AI에는 돈을 쏟아붓지만, 국내 제조업 노동자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생산 현장에 숙련노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배 노동자는 회사에서 쉽게 내보내지고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결원 발생 즉시 채용 단체협약과 경영·기술 변경 노사 합의 협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용과 배치전환이 자본 뜻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른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원청보다 하청에 더 전가됩니다. 불안정 초단시간 노동자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천만 명에 육박하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최대 6배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조차 불분명한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바깥의 사각지대 노동자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이 그어 놓은 '선'을 넘어야 합니다. 금속노조 18만 조합원 모두 '단결'과 '연대'로 나아갑시다. 원청, 부품사, 자회사, 하청 노동자들이 펼치는 모든 연대가 '저항'이며 '반격'의 시작입니다.

3월 3일 금속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업종별 공동 투쟁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조직혁신을 골자로 한 2026년 사업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업종별 미래 전망·대책,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모두 기업별 각기 투쟁보다 모여서 투쟁해야 교섭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사내하청·사

내용역·자회사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원청교섭' 성사와 확대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마구 늘어나는 정리해고·구조조정과 하청·비정규 노동자 차별에 더 크게 모여 대응하려는 취지로 25년 전 금속노조를 세웠습니다. 금속노조 시스템이 어떠한지 우리 내부가 더 단결하고 어떠한지 외부 환경 대응력이 더 높아질지, 이를 주제로 현장 토론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18만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산별노조를 만들도록, 2년 임기 동안 금속노조를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금속노동자> 376호에는 금속노조 2026년 투쟁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읽고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운산 온드리에 꽃이 피듯
우리 노동에도 봄이 올거야

한국지엠 원청에 맞서!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가 2월 9일 오후 한국지엠 세종중앙물류센터에서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대전충북지부

박향주 / 금속노조 선전홍보국장

“금속노조는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켰고, 지회 조합원 중 이탈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덕분에 저희 다시 출근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가 2월 11일 현장으로 돌아갔다. 복귀 소식을 전하는 김용태 지회장 목소리는 한껏 들뜨면서도 긴장감이 묻어났다.

집단해고와 현장 복귀, 지엠부품물류지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지엠은 20년 넘게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고용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바꿔보겠다고 지난해 7월 금

속노조에 가입하자, 한국지엠은 고용승계 관행을 스스로 깼다.

한국지엠은 기존 하청업체(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업체는 11월 28일 노동자 120명 전원에게 폐업과 해고 예고를 알렸다. 한국지엠 원청도, 바뀐 업체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에 손사래를 쳤다.

지회는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12월 4일 ‘지엠부품물류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한국지엠과 우진물류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했다.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동자들 억울한 사정을 알렸다. 노동부 장관도 만났다.

계속 두들겼다. 결국 노동부 중재로 12월 2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하청 업체(정수유통)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지엠과 새 업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터를 지킨다는 마음 하나로 지엠부품물류지회 전 조합원은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앞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새해 첫날 해고자가 됐다.

김용태 지회장은 “노동조합도 처음인데 해고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투쟁까지, 솔직히 무서웠다”고 당시 심정을 털어 놓았다. 지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1월 6일 열린 올해 첫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찾아갔다.

“고립될까 봐 두려웠어요. 노조 중집 동지들께 지엠부품물류지회가 외롭지 않게, 지엠부품물류지회만의 투쟁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어요. 금속노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대’가 이렇게 힘 나는 것이구나. 몽클한 순간이 많았고, 세종까지 찾아온 동지들 보며 이게 금속노조구나! 제대로 느꼈어요.”

“조합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물류센터 지키며 물량 반출을 막았습니다. 96명으로 투쟁 시작해 복귀 합의까지 96명 모두가 농성장을 지켰어요. 조합원들이 나쁜 선례 남기지 말자는 얘길 많이 했습니다. 우리 투쟁 과정과 결과에 오롯이 우리만 영향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장은 물론이고 언젠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힘내서 싸우자고들 하셨어요.”

한국지엠이 2월 2일 교섭장에 나타났고, 5일 금속노조의 전원 고용승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해고 40여 일 만이다. 지회는 다음날 조합원 총회를 거쳐 11일 현장에 복귀했다.

현장에 돌아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김용태 지회장

은 “우선 현장에 돌아와 좋았고,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를 쟁취했다. 해고 기간 임금 지급도 약속받았다. 무엇보다 투쟁을 통해 한국지엠 원청을 교섭장에 앉혔다. 노사 합의로 한국지엠 원청의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물론 아쉬움이 크다. 한국지엠은 해고 노동자들을 정수유통의 재하도급 업체로 고용했다. 김용태 지회장은 “이번 합의가 완벽하진 않다”라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를 현장에 돌아가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라고 설명했다.

지엠부품물류지회는 올해 임금·단체교섭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한국지엠 원청에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합원들도 꾸준히 만난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있어 가능했거든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함께 움직일 때 가장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엠부품물류지회가 가야 할 길을 앞으로도 계속 조합원들과 함께 가려고요.”

김용태 지회장은 “지회 조합원들 의지가 강하기도 했지만, 금속노조 투쟁 지원과 연대를 보면서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투쟁을 평가하자면 ‘함께 싸워 함께 승리했다’는 말이 딱 맞아요. 특히 한국지엠지부 얘길 꼭 하고 싶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같은 노동자로 한국지엠을 향해 함께 소리치고 함께 투쟁했습니다. 감사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지엠 자본의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한국지엠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다

‘직영 정비사업소 전면 폐쇄 철회’ 한국지엠 노동자 투쟁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지엠 서울서비스센터 앞에서 직영 정비 폐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진희 선전홍보부장

이영수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

노동자들 뒤통수 친 한국지엠 사측과 ‘본사 방침’

한국지엠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당장의 파국은 면하게 됐다. 한국지엠 노사가 직영정비센터 세 군데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3월 10일 ‘직영정비사업소 관련 특별 노사협의’에서 기존 직영서비스센터 9곳 중 대전·전주·창원 3곳을 ‘정비 서비스 기술 센터’로 계속 운영하기로 사측과 합의점을 찾았다. 인천 직영정비센터는 ‘하이테크센터’로 만들어 협력사 교육 등 정비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7일 한국지엠 사측은 모든 직영 정비사업소를 2026년 2월 15일 전면 폐쇄하겠다고 알려졌다. 인천, 서울, 동서울,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부산 등 전국 9곳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어처구니없는 11월 7일 사측 발표부터 가까스로 노사 합의를 마련하기까지 130여 일, 그동안 도대체 한국지엠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투쟁은 어떤 의미를 갖고,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한국지엠 노사는 앞선 10월 23일 2025년 임금·단체교섭에 합의했다. 이때 사측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관련해 노사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사 합의 후 불과 2주 만에 사측이 약속을 뒤집었다.

합의서 도장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아 노사 합의를 파기한 한국지엠 사측은 노동조합 문제 제기에 ‘본사 방침’, ‘글로벌 지엠 결정’이라는 말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사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당시 공적자금 8천100억 원을 받고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약속한 2028년이 가까워져 오는 상황에서 사측이 국내 지엠차량 정비망을 포기하자 지엠 철수설이 불거졌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 폐쇄 철회를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투쟁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일터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첫 번째로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았고, 노조는 빠르게 투쟁을 준비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1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직영 정비 폐쇄 저지를 위한 한국지엠지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상대책위)를 결성했다. 비상대책위는 지부 집행부는 물론이고 정비·창원지회와 현장 대의원으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정비지회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지엠 전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투쟁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

비상대책위는 현장 노동자들에 투쟁 상황을 꾸준히 알리고 투쟁 동력을 모아내는 일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11일 부평공장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서 매일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다. 정비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이 추진하는 전환 배치에 반대하고, 출근 투쟁을 전개하며 일터를 지켰다.

두 번째는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 목소리도 끌어냈다.

11월 24일부터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한국지엠 사측의 노사 합의 파기와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제대로 확인, 처벌하라고 압박했다. 인천, 창원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모아 국회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열었다.

세 번째로 연대 단위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직영 정비 폐쇄는 한국지엠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작년 12월 9일 ‘한국지엠 구조조정 저지! 자동차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이하 인천지역대책위)를 발족했다. 특히 인천지역대책위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 폐쇄 문제뿐 아니라 지엠의 한국 사업 철수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했다.

인천지역대책위는 우선 인천시 등 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한국지엠 철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역신문 기고와 지속적인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인천 시민에게 한국지엠 직영 정비 폐쇄의 문제와 부당함을 알렸다.

비상대책위는 금속노조와 함께 ‘한국지엠 직영서비스 폐쇄 저지와 원청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창원, 인천, 대전 등에서 한국지엠 정비 노동자들이 직접 지엠 차량을 수리하는 ‘입고 투쟁’을 연대 단위와 함께 진행했다. 정비사업자연합회, 자동차소비자연합회 등과 상황을 공유하

며 직영 정비 폐쇄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했다.

네 번째는 법적 대응 투쟁이다. 비상대책위는 법적 문제도 꼼꼼하게 제기했다. 노사 합의 위반에 대한 노동부 고소, 전환 배치 등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 직영정비센터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했다.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해 한국지엠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자동차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산업통상부,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 한국지엠의 노사 합의 파기 행태를 통제해야 할 노동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일방적 전면 폐쇄 저지 ... “부족한 결과 딛고 다음 투쟁 준비할 것”

이번 ‘직영 정비 유지 합의’는 노동자로서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 안이다. 인천·대전·전주·창원 4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직영센터는 문을 닫는다. 한국지엠지부는 이번 직영정비 폐쇄 철회 투쟁을 제대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올해 단체교섭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지부 비상대책위는 정비 조합원 고용 보장과 직영정비 체계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투쟁했고 1월 27일 시작한 특별 노사협약에서도 이 지점을 가장 염두에 뒀다. 부족하지만, 직영정비 체계를 유지한다. 제조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 그간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한국지엠 자본의 구조조정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자본의 일방적인 독주에도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중심으로 투쟁하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당장 올해 임단협 투쟁을 잘 치르자. 현장을 다시 조직하고 내용을 준비해 ‘2028년’을 제대로 대응하겠다. 🇵🇷



금속노조가 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2026년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사용자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청은 지금 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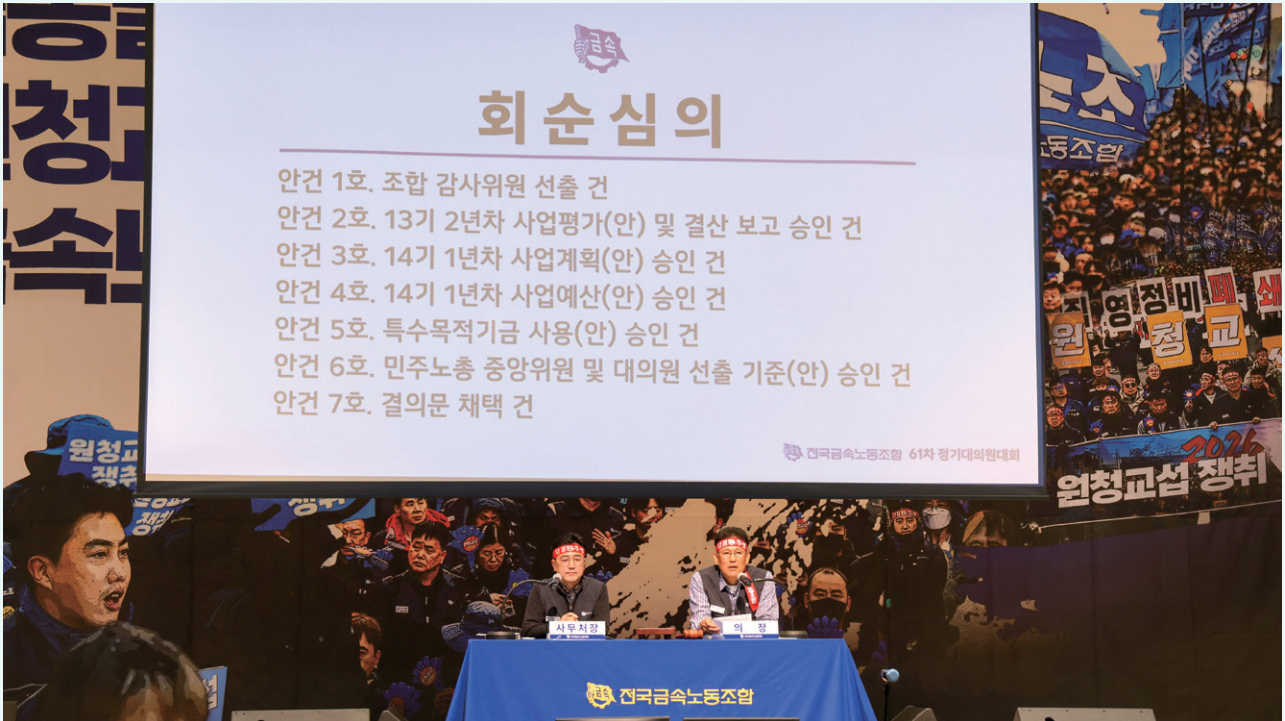
조건 없이 교섭장으로!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가
개정 노조법 2조 ‘진짜 시작’입니다.**



교섭력·대응력 높이고, 교섭 전략 재설계한다

[해설] 금속노조 2026년 핵심 사업 계획



금속노조가 3월 3일 오후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업종별 공동 투쟁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조직혁신 등 202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이진희 선전홍보부장

강지현 / 금속노조 기획실장

금속노조는 3월 3일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 골자를 정했다. 이 뼈대에는 ▲정세와 과제 ▲사업 방향과 목표 ▲핵심 사업 ▲영역별 사업 ▲시기별 사업 ▲단체교섭 요구 방침 등을 담았다.

금속노조 둘러싼 정세와 과제

제조업 일자리 총량이 줄고 있다. 자본은 생산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양질의 일자리 공

동화를 막아야 한다. 또 금속노조는 해외 현지 생산 확대와 인공지능(AI) 일방 도입에도 대응해야 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업종에선 ▲내연 부품사 구조조정 ▲해외 생산 확대 및 산업전환 ▲고용 규모 감소 및 직무 구조 변화 ▲한국지엠과 공급·물류망 고용 위기 등에 대응해야 한다.

조선 업종은 곧 닥칠 호황기 이후를 미리 대비해야 하며 ▲숙련 노동력 부족과 하도급 구조 개혁 ▲노동 안전 위험 제거 ▲국내 조선업 공동화 저지 등이 과제다.

철강 업종은 탄소중립 전환 대응이 시급하다. 노조 참여 속에 사내하청·비정규직·자회사 총고용을 보장 받아야 한다. 전자 업종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과 국내 고용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이 모든 대응력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아야 함께 올라간다. 자본이 그어 놓은 '기업' 경계를 넘어 산업, 업종, 지역, 기업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노동자가 뭉쳐야 이 교섭력이 높아진다.

올해 금속노조 내 기업별 교섭을 온전히 펼치는 단위 조직은 444개 사업장, 조합원 16만 여명이다. 이 중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 지역별 사용자 집단과의 지부 집단교섭 등 초기업 교섭을 병행하는 조합원은 약 2만 5천 명 수준이다.

327개 사업장(조합원 약 13만 5천 명)은 각기 흩어져 기업별 교섭만 전개한다. 안타깝게도 기업별 교섭도 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기업마다 신규 채용은 없어졌다. 사측은 결원 발생 즉시 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 기업마다 생산 숙련노동은 없어지고 경영·기술 변경 노사 합의 협약도 사문화돼 간다. 고용과 배치전환도 자본 뜻대로다. 모두 기업별 교섭력 저하의 증거다.

이에 금속노조는 3월 3일 61차 정기대회에서 기업별 교섭과 함께 초기업 교섭 또는 사회적 협의를 병행해야 노동조합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넘어 다양하게 뭉쳐야 교섭력 확대” … 각급 단체교섭 사업과 업종별 공동 투쟁 함께

금속노조는 4월 14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올해 중앙교섭 상견례를 연다. 지역별 지부 집단교섭이 잇따라 개시되며 각 기업별 교섭도 시작한다.

올해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요구안 중 AI 도입 및 고용 보장, 정년 연장, 초기업 교섭 활성화 대정부 요구 등 3가지를 기업별 교섭만 진행하는 사업장에 단체교섭 요구로 제출한다. 예년과 같은 방식이다. 초기업 교섭 틀인 현 중앙교섭과 지역별 지부 집단교섭 가치를 각 기업별 교섭과 병행, 지속한다.

동시에 금속노조는 기업별 교섭만 펼치는 단위 조직들을 자동차·조선·철강·전기전자 등 4개 업종분과 위원회로 묶는다. 기업별 교섭에 업종별 공동 요구안을 추가로 낸다. 노조는 늦어도 이 요구안을 4월 중순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는 업종별로 정부·국회·사용자단체에 제출할 요구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요구안 역시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마련한다.

금속노조는 기업별 교섭 하나만 펼치는 다수 단위 조직이 함께 마련한 업종별 공동 요구안 수준을 조직 내부 토론과 확인을 거친 후, 4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올해 단체교섭 집중 파업의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4월 임시대회 이후인 5월부터 정부·국회·사용자단체와 업종분과위원회 간 협의가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본의 일방적인 차별·차등 분배 … “실질적 지배력 가진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야”

3월 10일 개정 노조법 2조가 발효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쥔 자도 '사용자'임을 명문화했다.

자본은 그동안 원청 회사, 부품 회사, 자회사, 사내 하청 회사, 다단계 하청 회사, 사내용역 회사, 사용자 조차 불분명한 특수고용 노동 등 '위→아래' 순위로



민주노총이 3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단체교섭 허용 '기업 경계'를 그어 놓고 각 노동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차별·차등 분배해 왔다.

그 결과 초단시간 불안정 노동자는 2백50만 명을 넘어섰다. 정규직 대비 절반의 임금 수준인 비정규직은 1천만 명에 육박했다.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최대 6.11배로 벌어졌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는 지속 증가 추이다.

금속노조는 3월 정기대대에서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노조 단위가 벌이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집단 실천 중 중요한 하나"라고 강조했다.

원청교섭 공동 요구안과 권고 요구안도 정했다. 원청교섭을 추진하는 교섭 단위는 ▲임금(임금인상, 임금지급 연대책임) ▲고용안정(업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노동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공동 요구한다.

3월 17일 기준,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한 금속노조 58개 지회가 원청사 1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업체로 보면 171군데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추진 단위

와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원청교섭 역시 4월 14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 개시 이후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사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4월 27일 임시대대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날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의 온전한 확립을 위한 대정부 요구도 마련할 것이다. 5월부터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초기업교섭 활성화 위해 시스템 손본다

앞서 살펴봤듯 올해 금속노조 단체교섭 사업계획의 골자는 ▲기업별 교섭과 병행하는 현 중앙교섭과 지역별 지부 집단교섭의 가치 지속 사업 ▲기업별 교섭과 병행하는 업종별 공동 요구 사업 ▲기존 단체교섭과 병행하는 원청교섭 쟁취 사업 ▲모든 단체교섭과 병행하는 대정부·대국회·대사업자단체 협의 사업 등이다.

이 같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 입장에서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의 저항이자 개입이다. 자신들이 독점한 산업정책과 자본 투자 의사결정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방해한다고 판단한다. 사용자들은 자신을 가로막는 단체교섭을 이중삼중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내부 상태도 들여다보자. 자본의 오랜 갈라치기로 18만 조합원 단결력이 떨어졌다. 사업장 바깥을 향한 연대는 물론이고 본인 소속 기업 내 원하청 연대 의식도 높진 않다는 게 노조가 지난 3월 정기대대에서 밝히고 확인한 주체적 조건이다.

금속노조는 3월 정기대대에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 전개가 용이하도록 조직을 바꿔야 한다”라고 설명했고 대의원들은 ‘조직혁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25년 전 금속노조 창립 정신을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비해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지 깊고 넓게 성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전략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기업별 단체교섭에만 의존해 온 다수 조합원이 이종삼중 교섭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현장 토론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금속노조의 전략적 과제는 기업별 교섭과 초기업 교섭의 병행이다. 기업별 교섭만으로는 노동에 절대 불리하다. 기업 경계를 넘나드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해 결과만으로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양하게 시도하고, 노조 집행부 임기를 넘어 지속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개혁이 금속노조에 필요하다. 조직 운영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놓고 토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조직혁신 소위원회(아래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 노조는 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4월 20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겠다. 이때 의결 내용은 곧 이은 4월 임시대대에 보고한 다음, 내부 토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업 울타리를 넘고, 정치 쟁점화 투쟁으로!


금속노조는 혁신위원회 활동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기업’ 울타리를 넘어,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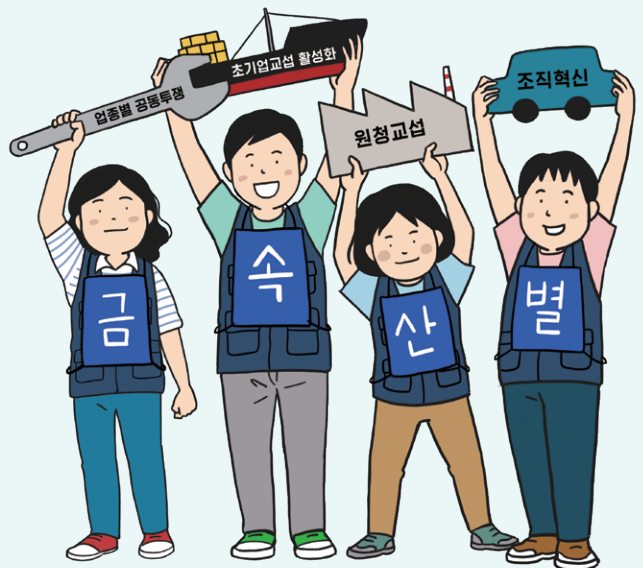
우선 혁신위원회 토론을 통해 조합원들이 기업별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함께 펼칠 방안이 무엇인지 집

중적으로 토론한다. 2027년 단체교섭 사업도 미리 구상한다.

금속노조는 노조 규약 부칙에서 기업지부 설치 조항의 ‘한시성’을 ‘산별교섭이 정상화될 때까지’로 2019년 바꾼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금속노조 규약 부칙 상의 문구)’의 여러 경우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금속노조 모든 사업은 정치·사회적 제도와 환경에 직결돼 있다. 2027년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로 진입한다. 임기 중반기로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금속노조와 노조 각 업종분과위원회 요구를 반영시켜야 한다. 결국 정치 쟁점화 투쟁이 필요하다.

또 금속노조 단체교섭, 조직 운영, 재정 운영 혁신 과제를 토론하고 이후 조직적 합의 내용을 2027년 사업에 꼭 반영해야 한다.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올 10월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AI의 고용 위협 막고, 정년 연장 본격화”

[해설] 금속노조 2026년 임금·단체교섭 요구안

신혁진 / 금속노조 정책부장

금속노조가 3월 3일 6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등 중층적 교섭 틀을 갖고 있다. 요구안도 마찬가지다. 각 교섭 단위에서 다루는 요구안은 해당 조합원 의견을 담는 한편, 금속노조 운동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한다. 올해 각급 단체교섭 요구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설계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자.

1 중앙교섭 요구안 ①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 ① 조합과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자의 고용안정·노동안전·인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의 숙련과 창의성을 확장·보조해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활용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AI)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으로 사전 평가한 뒤 고용보장, 교육훈련, 노동안전,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도입한다.
- ③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한다.

1. 인공지능(AI)이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의 종류 및 범위
 2. 인공지능(AI)이 수집한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3. 인공지능(AI)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
 4. 인공지능(AI)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목록
 5. 사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권한
- ④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사 조치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당함을 주장할 시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가 진다. 이때 회사가 인공지능(AI)이 제공한 정보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면, 인공지능(AI)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 인사 조치에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인공지능 현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치켜세우면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 현장 투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다.

먼저 금속노조는 인공지능 도입 범위와 활용 방향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자 한다. 노동인권과 고용을 보

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당연한 요구다.

인공지능은 고용안정, 노동안전, 인권, 개인정보 등의 핵심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선부른 기술만능주의가 득세한다. 영향과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AI 사용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온다.

인공지능은 인간 중심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술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활용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인공지능을 노동자 배제와 소외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위험하지만, 노동자가 숙련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조합 참여는 필수다. 신기술 도입은 노사 협상 대상이며 인공지능도 예외는 아니다. 사측은 인공지능 도입에 앞서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인공지능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핵심 권리 보호 대책을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올해 임단협 쟁점 된 인공지능(AI) ... “도입 땐 고용 안정 합의해야”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정보 공개 요구 권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에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투입하는 정보 내용과 처리 방식에 따라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이 결정된다. 노동조합은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범위, 정보 처리 알고리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즉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임의로 투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인사 관리 활용 원칙을 정한다. 사측은 인공지능에 투입된 정보, 처리 과정, 인사 조치 결과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자본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 관리자가 수행하던 지시, 평가, 규율을 자동화한다. 이는 투명성 부족, 책임성 회피, 이의 제기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노동자 통제 강화와 책임 회피 도구로 사용할 위험도 크다. 특히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은 정확하다고 우기며, 노동자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측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사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할 때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 설명하지 못하는 결정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2 중앙교섭 요구안 ②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 ① 회사는 조합원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정년 조정 과정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의 견청취 내지 협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내지 부문별 근로자대표 등과의 협의 및 합의 등으로 조합과의 합의를 갈음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노후 시기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연금 제도다. 그러나 만 60세 법적 정년과 달리 국민연금은 2026년 현재 만 64세(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받는다.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후 빈곤 문제, 고령자



생존권과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정년을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안 중 가장 빠른 경우도 2028년에서야 정년을 1년 연장하는 수준. 당장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법적 정년 연장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통한 돌파가 필요하다.

정년 조정 과정에서 자본이 경영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임금제도 개편을 요구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시행할 당시 박근혜 정권은 사측의 취업규칙 일방적 변경을 가능케 한 바 있다. 사측이 정년 연장을 빌미로 임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노동조합과의 합의 요건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3 중앙교섭 요구안 ③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회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국정과제가 금속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① 정부는 사회적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
- ② 정부는 각종 노사 지원 정책 시행 시 금속 노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③ 정부는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는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④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

'노동 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초기업 수준 노사 교섭 확산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별·지역별 교섭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정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도록 노사가 힘을 모아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중앙교섭에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방식으로 제기한다. 지부집단교섭에서도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를 제출한다.

먼저 금속 노사는 정부에 금속노조 산별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금속노조는 전체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여 산별교섭에 임해 왔으나 교섭 합의사항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제한적이다. 산별교섭 결과물을 더 많은 노동자가 보장받는다면 사회

적 불평등 완화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중소기업 교섭 참여 사업장에 대한 혜택 제공을 요구한다. 중소기업 교섭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효과는 입증된 사실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교섭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금속 노사에 합당한 혜택을 줘야 한다. 각종 노사 지원 정책에 있어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한 금속 노사단체의 참여 체계 마련을, 마지막으로 위 요구를 실현할 노사정 협의 구조의 마련을 요구한다.

더불어 위에 설명한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와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중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등 중앙교섭 요구안 세 가지는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도 제출해야 한다.

4 중앙교섭 요구안 ④

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노조는 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11,540원과 월 통상임금 2,608,040원 중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액은 고정급 기준 임금인상 요구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을 확보하고 산업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미조직 금속산업 노동자에 대한 금속노조 영향력 확대와 함께 ‘금속노조 산별임금체계 진전’ 등을 목표로 한다.

법정최저임금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속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



하는 임금제도다. 산업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해당 협약을 채택한 사업장 조합원뿐 아니라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 사내하청·관계사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5 임금인상 요구

금속노조는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9,6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기본급 인상 금액에서 정기·호봉 승급분은 제외한다. 기본급 인상 금액은 경제지표와 임금 실태에 근거해 산정했다.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업장 조건에 따라 더 높게 요구할 수 있다.

먼저 금속노조는 임금의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정률 인상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

경제지표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한다. 경제성장률은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낸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전체 소득 중 노동자의 몫이 줄어든다.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95%로 전망한다.



다음으로 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의 연간 증가율로 노동자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낸다. 생계비는 오르는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한다. 2026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1.95%로 전망된다.

최근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가 있다. 20여 년 만에 물가상승률은 1% 대로 떨어졌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압박을 느낀다. 코로나19 이후 높은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제한적인 탓.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과 같은 기간 금속노조의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면, 실질임금이 2.2% 하락했다. 이를 고려하여 작년과 올해는 1.1%의 보정치를 적용한다.

금속노조는 매해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 임금 현황을 파악한다. 2025년 임금체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사업장의 월 고정급 평균은 4,920,874원이다. 2025년 단체교섭의 결과 월 고정급은 평균 118,413원 인상됐다. 2025년 평균 고정급은 5,093,287원으로 추산한다.

또한 실생활의 안정적 기초가 되는 고정급을 기준으로 인상 요구액을 수립한다. 경제지표와 임금 실태를 반영하여 고정급 기준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도출하고, 평균적인 '고정급의 기본급 연동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급 임금인상 요구액을 수립한다.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2026년 임금은 5% 이상 인상해야 한다. 금속노조 임금 실태에 이를 적용하면 고정급 최저 인상액은 251,964원이다. 고정급 인상 요구액에 '고정급의 기본급 연동 비율'(1.6842)을 적용하면 기본급 인상 요구액 149,600원이 나온다.

6 사업장 필수 요구안 ①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 ①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 ④ 회사는 본 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고용안정 등]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하청 노동자도 노동자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외침으로 지난해 노조법을 개정했다. 왜곡된 고용구조 재편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열망을 담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사업장 필수 요구안으로 채택했다. 금속산별협약 중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조항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단위가 올해 교섭에서 해당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

금속산별협약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할 경우 회사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성 개념이 확대됐지만, 원청이 단순히 교섭 요구에 응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섭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된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원청이 교섭 요구를 지속 거부하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게 된다.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단체교섭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더라도 원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교섭을 회피할 수 있다. 원청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교섭을 피한다면 하청노조가 과도한 부담을 진다. 최소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할 때,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금속산별협약은 ▲사내하청·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불이익 처분 금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

의 제공 등을 규정한다. 또한 사내하청이 변경될 때도 고용, 근속, 단협 등이 승계된다는 내용을 도급계약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7 사업장 필수 요구안 ② 중앙·지부집단교섭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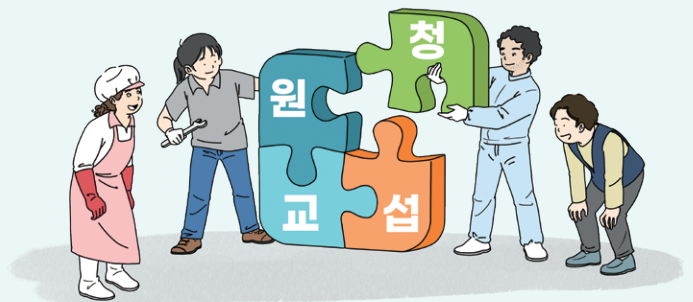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은 사용자에게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가입과 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한다.

사용자의 초기업교섭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앞서 설명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도 함께 제출한다.

단, 초기업 교섭 참가 약속 없이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만 합의할 순 없다. 중앙교섭 대신 지부집단교섭 참여를 목표로 하는 사업장은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로 대체해 제출하면 된다.

8 원청교섭 공동 요구안 등

올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요구안도 마련했다. 원청교섭 추진 사업장은 사측에 ▲전문 ▲총칙(교섭 및 체결 권한, 협약의 준수·이행 의무) ▲임금(임금인상, 임금 지급 연대책임) ▲고용안정(업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노동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공동 요구키로 했다. 📢



설계할 것인가, 설계 당할 것인가

2028년 이후를 위한 노동의 문법

오민규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경제와 산업, 무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전망 한 가지가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있어 ‘2028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이다.

우선 전방위적 관세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2028년에 끝난다. 인간의 지적 노동이 AI로 대체되며 파생될 경제적 파국을 예고한 ‘시트리니 리포트(Citrini Report)’가 예측한 경제 붕괴 시점도 2028년이다.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라는 제목의 이 리포트가 공개되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에도 2028년은 격동의 해다. 인간의 형상을 한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Atlas)’의 생산공장 투입 시점이 2028년으로 예고되어 있다. 군산공장 폐쇄 후 산업은행이 GM과 체결한 10년짜리 계약서가 만료되는 시점도 2028년이다. 현대차와 GM이 체결한 MOU에 따라 북미와 중남미에 양사의 공동개발 차량이 출시되는 시점도 2028년이다. 그해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도 치른다.

충돌형 관세전쟁 vs 협상형 관리무역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국가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IEEPA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한 새로운 임시 글로벌 관세 체제를 선언했다. 백악관은 우선 10% 임시 관세(150일)를 공식 명령으로 발효하고, 이후 15%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전에 예견됐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도 준비된 카드를 내민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관세전쟁을 중단하지 않겠구나”라는 점을 확인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 언론사들을 불러 나라별 관세율을 직접 설명하던 트럼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 않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오석근 경인콜렉티브

지난 1년간 미국의 교역국들도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매겼던 EU는 최근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관세 대신 '최저 수입 가격'을 제안하면 심사하여 관세를 삭감할 수 있는 '가격 약정'에 합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려온 캐나다 정부는 올해 1월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연간 4만 9천 대의 쿼터를 정해 일정 가격 이하의 전기차에 최혜국 관세(6.1%)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랜 협상 끝에 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인도와 EU는 연간 10만 대 쿼터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차량에 대해 관세를 큰 폭으로 낮추어 장기적으로 10%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기차에는 적용 시점을 5년 늦춘다.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무역 합의는 여러 공통점을 갖는다.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핵심은 '자동차'다. 트럼프 관세전쟁보다는 보호무역 성격이 약하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인 자유무역을 향해 있지도 않다. 다만 일정한 쿼터를 정해서 자유무역의 길을 열어놓되,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 가격대의 차

량만 적용하도록 했다. 큰 차량이 많이 팔리는 캐나다는 저가형 EV에 길을 열어줬지만, 소형차 위주의 EU와 인도는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한다. 자유무역도 보호무역도 아닌 이들 합의 추세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면 '협상형 관리무역'이 적당해 보인다. 당분간 미국의 충돌형 관세전쟁과 미국 밖의 협상형 관리무역이 패권을 다투는 경쟁, 2028년쯤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미국과 비(非)미국의 공급망 분리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의 주요 상대는 중국이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아니라 기존 우방을 표적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상이다. 자연스럽게 미국 vs 비(非)미국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전기차 공급망에서도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트럼프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따위의 얘기를 '가짜 뉴스'로 치부한다. 그래서 CO2 규제도 풀고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도 없애버렸다. 작년 4분기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GM 71억 달러 특별손실 반영, 포드 195억 달러 손실 반영, 스텔란티스 222억 유로 손실·총당 반영 등 미국의 자동차 빅3 업체들은 그동안 전기차에 투자했던 천문학적인 비용을 모조리 손실 처리해 버렸다.

하지만 유럽과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유럽은 드디어 지나긴 EV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을 벗어나 전기차 시장점유율 3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 NEV(신에너지차) 신차 점유율이 이미 50%를 넘어섰다. 그동안 일본 자동차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동남아시아에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제 전기차 공급망은 중국·유럽·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공급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급망의 거대한 분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도 새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배터리 합작법인을 비롯해 메타플랜트까지, 거대한 전기차 생산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의 선택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 2028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벌어질지, 트럼프 세력 재집권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말이다.

생존 위한 적과의 동거, 전략적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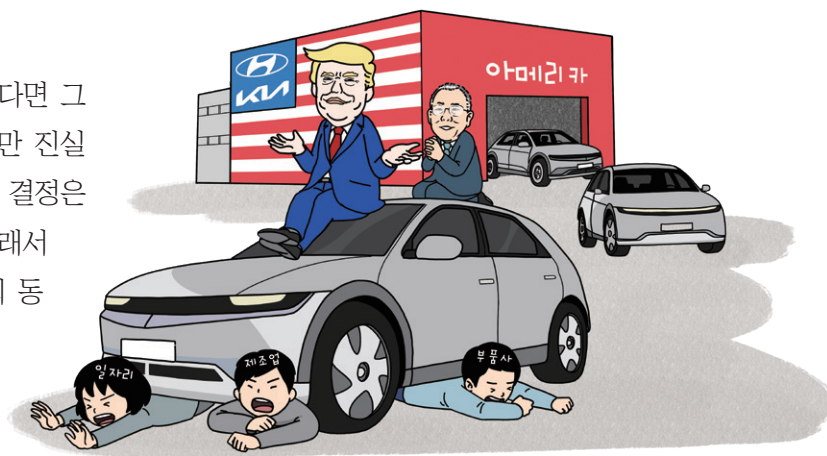
“지금 경제와 무역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역설적인 명제지만 진실을 담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신규 투자 결정은 거대 자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선택한 길은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맞이하는 전략적 제휴다. 어차피 대규모 신규 투자는 불가능하니 예상되는 위험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

르노자동차가 수십 년 동반관계를 이뤘은 닛산을 버리고 중국 지리(Geely)와 손을 잡았다. 소형차만으로 중국·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없어 지리가 가진 중형차 플랫폼 강점을 활용하려는 것. 가장 먼저 한국에서 르노코리아 지분을 32% 지리에게 넘기며 협작을 시작했다. 똑같은 실험을 브라질에서도 이어간다.

GM은 현대차와 손을 잡았다. 4종의 차량을 공동 개발해 북미와 중남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데, 핵심은 ‘부품 공동구매’에 있다. 플랫폼을 공유해 동일한 부품을 사용한다면, 대량으로 공동 구매할 때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골치 아픈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스타트업 리비안(Rivian)과 동맹을 맺었다. 도로에서 경쟁하던 다임러 트럭과 볼보가 손을 잡은 것도 소프트웨어 때문이다. 거대한 전자장치가 되어가는 자동차는 이제 생성형 AI와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능까지 탑재해야 하기에 고성능 컴퓨팅을 필수 요소로 담을 수밖에 없다.

브랜드는 많지만 신차 개발·출시에 어려움을 가진 스텔란티스는 중국의 리프모터(LeapMotor) 차량을 가져와 자신의 판매망에 깔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분야에선 최강이지만 전기차 개발에는 뒤쳐진 토요타



는 광저우자동차그룹(GAC)과 손을 잡고 최저가 전기차를 내놓는다.

피지컬 AI, 신기술인가 신기루인가

“로봇이 출근하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행사에서 현대차가 공개한 아틀라스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생산 자동화의 마지막 목표인 최종 조립 업무(의장)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눈이 쏠린다. 2028년 미국 생산공장부터 투입하겠다는 발표에 주식시장은 열광했다.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자산 투자자들은 환호한다. 주주 자본주의의 민낯이다.

하지만 피지컬 AI가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이족 보행에 춤도 추고 백텀블링도 하지만, 조립 업무에는 쓸모없는 동작일 뿐이다. 조립공정에 필수적인 체결·장착은 ‘손끝의 미세한 감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업무에 있어서 피지컬 AI는 인간을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게다가 80~90kg에 달하는 이들 로봇은 ‘전기 먹는 하마’이다. 한 시간 움직이면 한 시간 충전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자니 무게가 늘어 효율이 줄고,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자니 멋이 없다. 주식 투자자들 흘리는 데 걸땀은 매우 중요하다.

10년 전부터 자율주행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여전히 자율주행은 안전하지 않은 기술이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유행도 따라가 보지만, 불보가 야심 차게 내놓은 EX90은 디지털 자동차 키가 먹통이 되고 휴대폰 연결은 불안했다. 인포테인먼트* 오류도 잦았다. 결국 불보는 모든 차량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현대차그룹이 1월 5일 미국에서 열린 2026 가전·정보기술 전시회(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만 했다.

피지컬 AI 개발자들은 입을 모아 얘기한다. “버그(bug, 결함) 없는 소프트웨어(SW)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SW를 출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출시해 놓고 디버깅(debugging, 오류 수정)하는 거죠. 그런데 게임 같은 SW는 버그가 생기면 캐릭터가 망가지지만, 피지컬 AI의 경우 버그가 생기면 사람이 죽고 다칩니다.” 현대차가 공언한 2028년, 과연 아틀라스는 버그 없이 생산공장에 투입될 수 있을까?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먹구름

자동차 강국 독일도 흔들린다. 폭스바겐은 2028년까지 비용 20% 절감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3만 5천 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아우디는 2029년까지 7천 5백 명, 포르쉐는 2029년까지 천9백 명, 님러 트럭은 2030년까지 5천 명, 보쉬는 2030년까지 만 3천 명, ZF는 2028년까지 만 4천 명 감원을 계획한다. 2030년까지 자동차공장 노동자 9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중국 진출로 먹고살았던 OEM(위탁업체) 업체들이 이제 중국 토종 업체에 밀려났다.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긴 했지만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모조리 중

* 정보(information, 인포메이션)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합성어

국·한국·일본 업체에 맡기는 실수를 범했다.

한국 자동차산업 기상 상태도 좋지 않다.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가 '경력 재설계'라는 이름의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현대모비스도 램프 사업부 전격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유럽 CEO는 유럽 현지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연일 떠드는 현대차그룹의 움직임은 바야흐로 '한국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한국지엠 역시 시도 때도 없이 '철수설'이 불거진다. 최근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집단해고, 직영 정비소 폐쇄 등 정비·물류 파트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내수판매가 바닥을 치는 양상은 한국지엠만이 아니라 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중견 3사 모두의 위기를 설명해 주는 핵심어다. 과연 2028년 이후 한국에 '자동차 중견 3사'라는 단어가 남아 있을까?

생존 게임인가, 판 같이 시작인가

자동차산업은 2028년 전과 후로 완전히 다른 길 또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 관세와 무역전쟁, 전기차 전환의 흔들림, 공급망 분열과 리스크, 로봇과 자동화... 듣기만 해도 걱정이 몰려온다. 하지만 '암울한 미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분명한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길을 찾고 있다. 정부도, 자본도, 노동도 각자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말은 미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자동차산업은 늘 전환을 겪어왔다.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공장에서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현장은 무너졌지만, 어떤 현장은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냈다. 기술 도입을 막을 것이냐 순응할 것이냐가 핵심이 아니다. 기술 도

입의 규칙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다. 그 과정을 '합의'로 바꿔낸 곳이 더 오래 버티는 법이다. 전환 훈련을 비용이 아니라 권리로 만들고, 배치전환을 구조조정 통로가 아니라 고용 보장의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함께 설계하는 판으로 바꿔야 한다. 사측과의 교섭을 강화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자. 정부와도 교섭해야 한다. 관세와 산업정책은 노동자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데, 노동자가 그 테이블에 없으면 항상 '나중에' 통보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동자 자신을 변화의 피해자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장을 알고, 생산을 알고, 위험을 알고, 품질을 안다. 그 지식은 협상력이요, 사회적 설득력이 될 수 있다.

2028년은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당장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2028년 이후를 결정한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제도화하고, 누구와 연대하느냐에 따라 '생존 게임'이 될 수도 '판 같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설계할 것인가, 설계 당할 것인가! 준비하는 쪽이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 움직이자. 🚗



금속노조가 지난해 2월 13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2025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노동자 역량강화 학교'를 열고 있다. 자동차산업 쟁점 교육과 노동조합 대응 방향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사진=이진희 선전홍보부장

한국 조선업체의 해외투자 배경과 향후 과제

“해외 공장 확대에 노동조합 ‘감시자’ 역할 필수”



HD현대가 HD현대베트남조선(HVS) 생산능력 확대와 건조 선박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며 베트남을 그룹 차원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HD현대베트남조선 칸호아성 공장 전경. 사진=HD현대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조선업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1970년대 울산과 거제에 대형 조선소들을 설립한 이후이다. 1970년대 당시 현대조선(현재 HD현대)이 설립될 때부터 ‘사양산업’인 조선업에 왜 진출하냐는 의견들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조선업 불황이 극심했을 때도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사양산업’이라는 단어는 조선업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수시로 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조선업이 한국 조선업이 장기 불황에 진입한 2015년에도 조선업 사양 산업론은 매번 꾸준히 제기되었다.

“과거 일본의 독무대였던 조선업에 한국의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 및 약간의 기술력으로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의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인건비와 스펀지처럼 세계에서 흡수한 기술력으로 세계의 선박수주를 독차지할 게 분명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업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 김주환(2008), “한국조선업의 세계제패 요인에 대한 연구 : 상품주기에 대응한 조선업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1)

될 것” (2008년 11월 8일 삼성중공업 주실토론펙)
 “조선업은 이미 중국에 주도권 넘어간 사양산업”(2015
 년 4월 28일 다음 증시 토론방)

낮은 조선업 사양 산업론

한국 언론들이 2010년대 조선업 위기 때 조선소는 정부
 부가 지원하기보다 청산을 해야 한다고 당연한 듯 말
 했는데, 최근 조선업의 위상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오래된 조선업 사양 산업론의 근거로는 글로벌 산
 업 경쟁(competition in global industry) 논리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가치사슬(value chain) 이론으로
 유명한 포터(M. Porter) 등이 정리한 논의에 따르면
 1940년대까지는 리벳 건조 방식으로 초기 강선 건조
 를 주도한 영국이 조선업 패권을 차지했다. 1950년대
 원가 경쟁에서 앞선 서유럽(독일, 스웨덴 등)으로 패권
 이 넘어갔다. 이후 용접 기술을 활용한 블록공법을 도
 입한 일본이 1960~80년대 세계 패권을 차지했다가,
 설비투자과 공법 혁신으로 한국이 1990년대 중반 이
 후 패권을 잡았다.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이 원가
 우위를 기반으로 패권을 차지하면서 한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상실해 사양산업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설
 명이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은 정말 사양산업인가?

기존 조선업 사양 산업론은 1980년대 이후 조선업
 의 선종 다양화 및 대형화, 그리고 건조공법의 발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이다. 1980
 년대 초반까지 조선소들이 건조하는 선박은 광물, 농
 산물 등 고체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과 석유 등 액체
 를 수송하는 유조선 두 유형이 중심이어서 상대적으
 로 단순했다. 두 선종을 주력으로 하면서 각국의 해군
 수요와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선, 크루즈 등의 수요가
 일부 있었다. 한국 조선업이 주력으로 하는 LNG운반
 선(액화 가스 운송)과 컨테이너선은 1950년대 후반 개
 발되었고, 해상 교역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1980
 년대 이후이다. 두 선종은 2000년대 이후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해군 특
 수선 시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양 산업론은 현대 조선업 초기의 단
 순한 상품시장을 전제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조선
 업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조선업 사양 산업

<표 1> 조선업의 시대별 경쟁 패러다임 변화

	1940년대	1950년대	1960~80년대	1990~2000년대	2010년 이후
영국	리벳 건조 공법 원가 우위	제품다양화 비가격 경쟁력	보조금 지급 국유화, 폐쇄	민영화, 설비 축소, 해외 매각	
서유럽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 구조조정	시장 보호 전략 (보조금 지급), 파산·폐쇄	
일본		정부 보호·육성, 용접-블록공법	원가 우위	제품다양화, 차별화 전략	
한국			정부의 육성	원가 우위 설비 확장/ 기술개발/공법 혁신	차별화 전략 Product-mix 재구성
중국				정부의 육성 설비 확장	원가 우위

* 출처: Cho Dong Sung and Porter, M. E.(1987), Changing Global Industry Leadership: The case of Shipbuilding. 1990년대 이후 내용 추가

론'은 2000년대 이후 조선업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설득력 없는 논의인데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방해했다. 종사자들이 낡은 사양산업에 종사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조선업 전반을 위축시켜 왔다.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일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전제하는 조선업 사양 산업론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선박 시장 별로 주도하는 나라가 공존하는 방식의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

한중의 세계 조선업 양분

2010년대 이후 세계 조선업은 한중일 3국이 주도해 왔다. 2010년대 건조량을 기준으로 중국이 35~40%, 한국이 30% 초반, 일본이 15~20%를 차지했는데, 최근 일본 조선업이 쇠락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표준선 전략'과 '외국인력 활용' 증가 시점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동일한 선박을 반복 건조하는 표준선 전략은 엔지니어링(설계) 역량 약화, 외국인력 활용은 기능직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2020년대 이후 일본은 자국의 선박 건조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건조 실적을 계속 기록한다. 일본 조선업의 수주량 급감의 여파는 중국 조선업의 수주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조선업 3국지'에서 향후 세계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이 양분'으로 변하고 있다.

2025년 말 조선업종 전문매체인 <일간조선해양>은 향후 세계 조선업 전망에 대해 "중국이 벌크선, 탱커 등을 중심으로 중하 기술력이 필요한 다수의 시장을 주도한다. 한국은 LNG를 비롯한 미래의 가스 운반선(수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액화 수송선), 극지 탐사선, 고가의 해군용 군함·잠수함 등 상류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 조선업이 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한국 조선업 사양 산업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진

단이다.

최근 중국 조선업은 7~8년 전과 완전히 다른 체질 변화에 성공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엄격한 생산공정 관리를 통한 인도일(delivery) 준수를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최근에는 중국도 인도일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0년 이상 건조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정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벌크선 등의 중하 기술력 기반 선박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기술 차이는 없다. 인도일 준수는 곧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버티지 않는다. 자립하고 있다. 중국 주요 조선소 대부분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다. 영업이익률이 10%대로 높은 조선소들도 여러 곳이다. 과거 한국 조선업이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 지원으로 조선업 경쟁력을 확보했던 것과 비슷한 경로로 중국 조선업도 성장하고 있다.

반면 상류 기술력 기반 선박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중국에 우위를 점한다. 향후에도 탈탄소 기반 선박 및 다양한 가스 운반선 등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업 패러다임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은 두 개의 층위로 구분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2000년대 이후 세계 조선업 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상류 기술 기반으로 '고품질/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 고속련 기능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현장 기능직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조선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과제

이제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업황이 회복된 2023년 이후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빅3 조선소의 해외투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다.

해외투자 유형은 1) 기존 해외조선소 투자 2) 해외 조선소 인수·확보 3) 해외 신규 조선소 설립·합작 4) 해외 생산 협력·위탁 건조로 구분한다. 3사의 해외투자 전략은 차이가 있는데, HD현대는 해외에 다중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한화오션은 미국 중심의 방위산업 시장 대응이 핵심이다. 삼성중공업은 직접 투자보다는 국내외 조선업체들과의 MOU를 통해 중저가 선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 같은 국내 조선업체들의 해외투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세계 선박 수요 대비 선박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Clarksons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조선소 수와 선박 건조 역량 모두 많이 감소했다. 조선업 호황으로 생산이 정점이었던 2009년 국제 교역용 선박을 건조 가능한 조선소는 321개였으나, 2023년에는 131개에 불과해 조선소 수 자체가 크게 줄어 들었다.

세계 선박 건조 역량 또한 2011년 63.7백만CGT에서 2024년에는 48.8CGT 줄어들었다. 특히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많이 감소했다. 덴마크 <Danish Ship Finance> 분석에 따르면 2-tier(중소형) 조선소들은 생산능력의 35%를 차지하지만, 수주잔량은 10%에 불과하다. 1-tier(대형) 조선소들은 생산능력의 65%, 수주잔량의 90%를 관리한다. 수주잔량이 부족한 2-tier 조선소들의 폐쇄가 지속되면서 2040년 2-tier 조선소는 현재의 1/3만 남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세계 선박 건조 역량(48.8백만 톤)과 2021~24년 평균 발주량(55.9백만 톤)을 고려하면 지금 선박 만들 조선소 야드가 부족하다. 실제로 공급이

<표 2>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의 주요 해외투자 현황

기업	국가	조선소	주요 내용	투자금액	투자시기
HD현대	베트남	HD HVS	생산능력 확대(95만 → 144만 DWT)	약 5,700만 달러	25년
	필리핀	수빅 조선소	조선소 부지 임대 후 생산	약 5.5억 달러	24년
	인도	타밀나두 조선소	인도 정부와 신규 조선소 설립 MOU	20억 달러(추정)	25년
	사우디	IMI 조선소	26년부터 연간 최대 40척 건조	현중 지분 20%	23년 이전
	중국		블록 제작 및 생산 협력		23년 이전
한화오션	미국	Philly 조선소 인수	조선소 지분 100% 인수	1억 달러	24년
	미국	Philly 조선소 확장	도크·안벽 추가, 생산능력 확대	50억 달러	25년
	싱가포르	Dyna-Mac	해양플랜트 제작기지 인수	약 4.5억 달러	24년
	중국		블록 제작 및 생산 협력		23년 이전
삼성중공업	카타르	QSTS	선박 개조, After Market 분야 협력		25년
	베트남	PVSM 조선소	유조선 3척 건조 협력 MOU		25년
	중국	Zhoushan 등	블록 제작 및 생산 협력		23년 이전

부족해 2021년부터 신조선 가격이 급등했다(신조선가 지수 2020년 말 125 → 2025년 말 184). 최근 해군용 특수선 수요까지 늘어나며 조선소 공급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물론 우려가 분명히 있다. 베트남을 제외하면 국내 조선업체들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중반 남해안에 중소형 조선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가 2009년 이후 대거 문을 닫았다. 혹독한 구조조정 경험이 있어서 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조선소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렵다.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과 조선업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조선소 사용자들은 원하청 노사관계의 부상과 중대재해 처벌 강화를 '사업 리스크'로 인식한다. 이에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 조선업체는 국내외 조선소의 병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초대형 구조물인 선박 건조 작업은 '구상(엔지니어링)과 재현(실제 건조)'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조선업 해외 진출 성공 사례가 드문 것은 구상과 재현의 분리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국내에서 엔지니어링만 하기보다는 실제 건조 작업도 진행하면서 설계 도면상의 종이배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과정에서 관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해외 공장 미래 불확실 ... 노사정 함께 조선업 중장기 발전 전략 세워야

결국 조선소 인력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장 기능직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조선업이 엔지니어와 생산기능직 숙련 인력 확보 실패로 쇠락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 즉 원하청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확 줄어든 '사내하청→직영' 전환 경로(사다리)를 일정하게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월 24일 산업통상부가 조선업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3천2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 등 '산업정책'과 엔지니어·생산기능직 노동환경 개선 등 '노동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 확대가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다. 정부는 한국 조선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노사정 테이블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조선업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조합 역할도 필수다. 해외 공장 확대를 두고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사용자 측은 해외투자 문제를 노동조합과 논의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조선업체들의 해외투자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는 확실하다. 숙련 노동자 인력 확보와 원하청 다단계 구조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금속노조가 조선업체 해외투자 확대를 비롯한 국내 조선산업 현황과 쟁점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



금속노조가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앞에서 조선소 다단계 하청 구조 해소와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향주 선전홍보국장

한국 철강기업의 변화 방향과 과제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정부·기업·노동조합·지역이 머리 맞대야”

2025년 12월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위원회와 노조 노동연구원이 <철강산업 전환과 노동조합 대응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철강기업 경영 전략과 정부 산업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노동조합 대응 과제와 요구를 담았다. 그중 ‘한국 철강기업의 변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부분(5장)을 요약해 아래에 실었다. [편집자주]

송관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철강산업은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2022년 매출이 27조 3,406억 원에서 2024년 23조 2,261억 원으로 15% 정도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1조 6,165억 원에서 1,595억 원으로 감소하여 1/10 수준으로 떨어졌다. 단기 순이익도 2022년 1조 382억 원에서 2024년 88억 원으로 줄어 1/100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2기 美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025년 3월부터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하여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철강 관세는 2025년 6월부터 50%로 인상됐다. 2025년 11월 1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의 관세 협상(15%),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관세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역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이 차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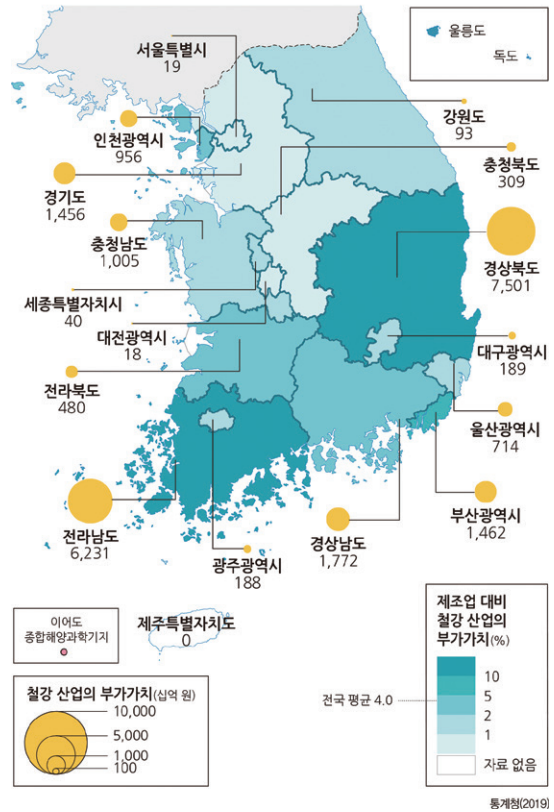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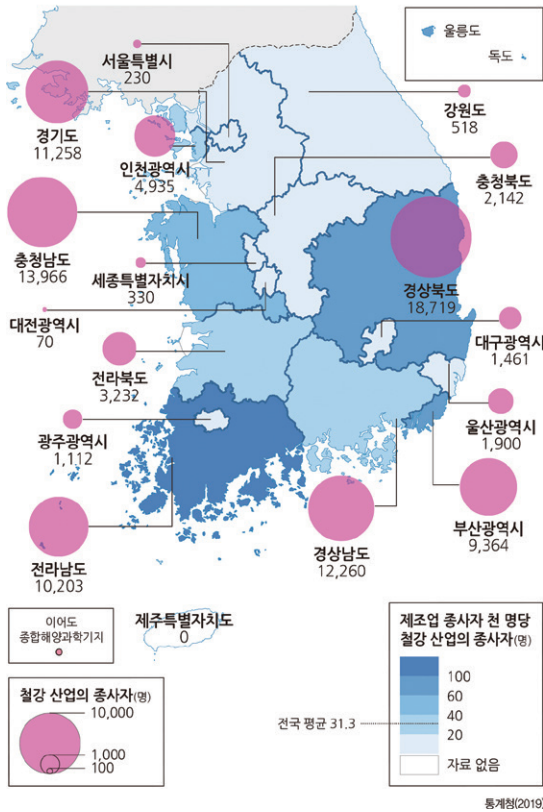
는 비중은 약 25.3%이며, 전체 수출액의 약 33.0%는 미주 지역, 약 17.1%는 유럽 지역이 차지하는 등 미주와 유럽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의 미국 관세에 이어 유럽도 철강에 대한 50%의 관세 부여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은 수출과 관련한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영상 위기, 지역사회에 직·간접적 영향 미쳐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철강산업 종사자는 인천 4,935명, 충남 13,966명, 경북 18,719명으로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대비 인천 2.1%, 충남 4.8%, 경북 6.1% 비중을 차지한다. 철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인천 1.2%, 충남 1.0%, 경북 7.5%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철강산업이 지역 일자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포항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철강기업이 산업위기 등을 이유로 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하는 경우 지역경제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

철강산업 종사자 및 부가가치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2022), '대한민국 국가지도집(2021)' 3권.

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포항은 지역 사업장의 90% 이상이 철강 유관 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최현경 등, 2019). 철강산업에 대한 품목 관세 50% 유지, 중국발 저가 철강 덩핑 및 국내외 철강 수요 감소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철강 업종에 대한 고용 위기가 점차 현실화해 지역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

실제 현대제철 현장직 노동자의 전환 배치 추진, 2공장의 섀다운 등의 영향을 받아 2025년 상반기부터 음식점업뿐만 아니라 택시, 숙박업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급격하게 경직됐다. 지역 상권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등 포항 전체의 경기 불황 분위기가 확산했다. 포항시는 2025년 7월 산업통상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2025년 8

월 28일부터 2년간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탄소 요구 속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현대자동차 철강 공급량의 약 72%를 현대제철이 담당한다. 현대차 차량 부문 원재료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은 부품 매입에 참여한다. 자동차 강판의 경우 국내공장, 미국공장, 인도공장, 튀르키예공장, 체코공장, 브라질공장 등 포스코 강판을 활용하는 인도네시아와 철강 수급이 없는 베트남공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장에서 현대제철을 통해 강판을 수급한다. 특히 현대제철 동일인(총수) 지분 중 상당수가 현대차·기아의 현대제

철 소유 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제철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2025년 준공된 루이지애나주 (Louisiana) 메가플랜트(HMGMA; 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에 2028년까지 약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50개 주중 천연가스 매장량 7위, 생산량 3위로 천연가스 주요 거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의 66% 수준, 한국 산업용(을) 전기요금의 42.6% 수준이므로 국내보다 전기로 운용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철강산업이 고로를 기준으로 1톤당 약 2톤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나 수소 등과 같은 저탄소 생산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Scope 3에 대한 관리도 점차 강화해 저탄소 철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다.

결국 현대제철의 경우 전기로 신설을 검토할 때 미국 등과 같이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제철이 당진공장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여 재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미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 비교

구분	미국 평균(A)	루이지애나(B)	B/A	한국 산업용(C)	B/C
전기 단가	118,000원 (80.1\$/MWh)	77,900원 (52.8\$/MWh)	66.0%	182,700원/MWh	42.6%

출처: 조선일보(2025.04.10.)를 바탕으로 편집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업장을 재배치하거나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영활동이다. 그러나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적 기간산업의 경우 의사결정과 대응 전략 수립을 기업에만 맡겨 두면 안 된다.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 역시 국가적으로 철강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개입을 통해 산업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붕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산업의 중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산업 위기와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을 소외할 위험이 있다. 실제 현대제철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와 같은 이유로 들어 사업장을 폐쇄했다. 포항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철강산업 공대위)를 만들기도 했다. 공장폐쇄 등 철강기업 구조조정과 원하청 전체 고용 실태 조사 및 공개, 국가 차원의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지속 가능한 철강산업 전환과 지역 고용·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논의·협의, 합의 없이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현대제철 방식은 여러 면에서 아쉽다.

*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에 50억 불을 추가하여 총 260억 불 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한 50억 불은 미국 로봇공장 신설, 제철, 자동차 생산량 확대 등의 영역에 투자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결국 철강산업 위기는 국가와 지역, 기업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동시에 산업과 기업 내 종사하는 노동자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지만, 노동자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미흡하다. 철강기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는 ESG 경영 관점에서 철강기업이 국가와 지역·시민·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노동조합은 대(對)기업 대응을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추진해야 한다. 포항 사례와 같이 지역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연대를 통해 논의 테이블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용과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물론 정부 정책이 기업 지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업과 노동조합·지역사회 전체가 중앙정부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역 내 핵심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와 같이 생산공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국가 간 경쟁력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지역사회, 노동자가 국가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은 정부 정책 변화의 동력이 된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행동 방향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대체 산업을 상향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철강산업 축소나 지역 재편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대체적 일자리를 마련해 지역 경제를 유지할 방안으로 대체 산업을 모색해 보자. 지역 경쟁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산업을 찾아본 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내부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비효율적인 대안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대체 산업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지역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철강산업과 같이 지역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산업은 기업에만 산업 위기 대응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 정부·기업·노동자·지역이 같이 고민해서 함께 살아갈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철강산업 위기와 노동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금속노조가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퇴직자들이 지난해 7월 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역 철강산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포항지부

“함께 만들어 나갈 원청교섭 첫 해”

금속노조 원청교섭 준비 상황과 이후 계획

정유림 / 금속노조 정책국장

대우캐리어,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 기륭전자, 삼선전자서비스,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하청 노동자들의 20년 넘는 ‘진짜 사장’ 찾기 투쟁은 우리 사회가 이미 사용자 숨바꼭질이 일상화된 간접고용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있다는 증거다. 자본은 이익과 권한만 갖고 책임은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지주와 마름 식의 전근대적 노동(계약)유형을 확산시켜 왔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 사용자라고 명문화했다. 금속노조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정 노조법에만 의존해서 원청 사용자 책임을 찾기는 어렵다. 3월 17일 현재 금속노조 87개 지회, 1만 7천여 명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현대제철 등 18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두 곳뿐. 사법기관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현대제철은 금속노조의 2026년 교섭 요구 공문 수신을 거부했다. 노조는 현대제철 원청에 팩스, 우편으로 공문을 보냈다.

불분명한 법·제도, 불확실한 정부 의지

‘진짜 사장 찾기’는 정부·국가 행정력을 활용할 순 있으나, 결국 금속노조 스스로 벌이는 단체교섭 확장 투쟁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는 3월 3일 열린 6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우리 과제를 확인했다.

먼저 영세·하청·다단계 간접고용 노동자를 묶는 공동의 교섭·투쟁을 적극 기획해야 한다. 둘째, 개별 하청노조 단위의 원청 교섭권 획득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셋째, 노조법 2·3조 개정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해 기업 단위로 설계된 현행 기업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기 투쟁도 함께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사회적 논의(협의) 구축 세부 로드맵을 정권에 요구하는 투쟁도 벌여야 한다. 하청노조 단위의 원청 교섭권 획득은 하청업체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초기업 교섭이기 때문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이 가장 큰 문제지만, 원청 교섭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적잖다. 고용노동부가 2월 27일 내놓은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 업체가 여럿이더라도 하청 전체는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본다. 원청사용자 교섭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절차적 복잡성

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도 문제다. 개정 노조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교섭 단위 분리가 원활하게 될지,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절차적 어려움 없이 교섭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 정부교섭 창구단일화 문제까지 꺼드니 셈법이 더 복잡해진다.

금속노조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공동 대응 필요

원청교섭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 의지는 불분명하지만, 노동조합 투쟁 기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3월 11일 14기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청교섭 추진 세부 방침'을 확정했다.

일사불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금속노조는 ①법 시행을 기다린 단위뿐 아니라 사전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단위들도 3월 10일 이후 일제히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다. ②동일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단위는 하나의 공문으로 묶어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한다. ③안정적 교섭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유사 단위도 교섭 요구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원하청 연대를 필두로 금속노조 전 조직이 움직여야 하므로 ④교섭 요구 공문 전달과 접수 확인 등 원청 지부·지회 협조는 필수다.

조합 사무처(법률원 포함)와 지부·지회가 상시 소통하는 가운데 ⑤3월 10일 이후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한 단위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금속노조 이외 노조의 교섭 요구나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여부를 즉시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⑥원청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필요시, 조합·지부·지회 논의를 거쳐 노동위 시

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⑦원청교섭 요구 단위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3월 말까지 원청교섭 요구안과 상견례 일정(1차 중앙교섭 4월 14일 이후) 통보 공문을 원청 사용자에게 보낸다.

금속노조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회피 시 해당 단위 대응 투쟁과 노조 전체의 공동 투쟁을 결합하여 대응할 것이다. 원청교섭투쟁본부를 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회의·집행위원회회의로 확대 재구축하고 금속노조 전체 교섭과 공동 투쟁을 유기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기업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기 ▲노조법 2조 재개정 등 후속 입법 ▲초기업 교섭 활성화 사회적 논의(협의) 구축 마련 투쟁 계획 등을 4월 27일 6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첫 해! 쉽진 않겠지만, 금속노조가 이십 년 투쟁의 결과를 허투루 만들진 않는다.

원청교섭 성사! 해당 사내외 하청·용역, 자회사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조 역사 속에 금속노조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투쟁이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 🙌



금속노조가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노동부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노동자 참여로 중대재해 막고, 안전한 현장 쟁취하자

[해설] 2026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계획

정우준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위험성 평가 사업 강화하고, 간부 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

지난해 9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사고사망만인율(1만 명당 0.29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현행 228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며 각종 노동안전 관련 법·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요란스러운 움직임과 현실은 아주 다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에서 삼표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했다며 원청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판결도 나왔다.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는 사라졌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160일 넘게 산재보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정부나 사용자들에 무작정 기대하지 말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해야 중대재해를 멈추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중점에 두고 올해 금속노조는 노동안전 보건 사업을 크게 핵심 투쟁과 일상 투쟁으로 나눠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핵심 투쟁은 ▲중대재해 대응 투쟁 전개 및 후속 대응 투쟁 강화 ▲위험성 평가 사업 강화 ▲실질적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 ▲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및 노안활동가 역량 강화 등 모두 4가지다. 노조는 올해 핵심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노동자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을 개선하겠다.

일상 투쟁으로는 ▲산재 처리 지연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강화 투쟁 ▲노동자 생명 안전 관련 법 개정 투쟁 ▲현장 안전점검 강화 사업 ▲금속노조 노안 간행물 검토 및 개정 사업 ▲금속노조 노안정책 역량 강화 등 5가지 사업을 계획한다. 상시적이고 현장에 닿는 정책 실현을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지난 2년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44건으로 노동자 4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제대로 된 사고 조사와 중대재해 대응을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 중대재해 투쟁 대응 지침에 대한 전 조직적 전파·숙지 외에도 즉각적 투쟁을 조직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즉각적 대응 이후에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요인에 대한 사업장 개선이 실질화되고, 자본의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노동자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와 작업중지권 쟁취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노동자 참여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 등 연초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위험성 평가가 노동자 참여와 눈높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부·지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작업중지권 실질화 투쟁도 중요하다. 우선 현장 간부들의 교육과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의 노동안전 문제에 더 면밀히 대응하고, 사업장 차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상시로 현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할 일상 투쟁 및 사업도 진행하겠다. 특히 산재 처리 지연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강화 투쟁을 더 확대하겠다. 정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근골격계의 경우 90일)로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리 기간 단축’만을 앞세운 불승인 남발과 상병 미인지가 반복될 우려도 크다. 우리는 처리 기간 단축 자체가 아니라, 추정 원칙 확대 등 당연인정기준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문을 더 열심히 두드리자. 산재 노동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7년 발간한 산재보상 실무지침서를 새롭게 개편해 현장 노안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지원하겠다.

분기별 현장안전점검과 신규 사업장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기존의 위험 요인뿐 아니라 폭염·한파 등 기후 위기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적 권리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입법과 자본의 대응에 맞선 투쟁 외에도 금속노조 내외의 위험 격차 해

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도 조직할 것이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투쟁,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이양 문제처럼 현장에 밀접한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도 필요하다. 또한 미조직·산업단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안전 일터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투쟁과 함께 조합 노동안전보건실은 노동 안전보건단체·전문가들과 정책단을 꾸려 법·제도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또한 펼쳐나가겠다.

조합·지부·사업장이 함께 만드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사업은 조합·지부·사업장이 합심하여 투쟁을 조직하고 정부와 자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 가능하다. 2026년은 시대와 법·제도를 역행하는 법원,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안전보건의 무너지면 현장이 무너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2026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진희 선전홍보부장

2010년대 노조 파괴의 함의와 현재성

노조 탄압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금속노조 과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노조 탄압 사례를 통해 살펴본 노조 운동의 위기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대 초중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금속산업에 집중적으로 벌였던 노조 파괴 사례를 다시 확인하고, 이때 사건들이 현재 금속노조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아래에 실었다. [편집자주]

1 들어가며

2010년 1월 1일 새벽 노조법 날치기 통과로 2010년 7월 전임자 급여금지제도 및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한이 시행됐다. 2011년 7월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포함한 복수노조법이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따른 결과였다.

1) 2010년대 초중반 금속노조에 대한 공격

이명박 정부 정책과 맞물려 2010년대 초반 금속노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됐다. 2010년 발레오만도, KEC를 비롯해 유성기업, SJM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손해배상 가압류 등 물리적·법적 노조 파괴가 자행됐다. 그 결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조합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탄압은 산별교섭과 노동조건 개선을 주도하던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거점들을 선별적으로 겨냥했다. 이는 우발적 갈등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재현된 구조적 현상이었다. 한국의 노조 탄압은 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과 사법 절차를 악용한 경제적 압박이 결합된 특징을 보인다. 특히 국가가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방조하는 주체로 작동했다.

2) 노조 탄압의 유형화와 현재성

노조 탄압은 크게 네 가지 이념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노조 결성을 막는 ‘노조 회피’ 전략이다. 둘째, 사측이 통제하는 어용노조를 세워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노조 대체’ 전략이다. 셋째, 결성된 노조의 활동을 징계와 고소 등으로 위축시키는 ‘노조 억압’ 전략이다. 넷째, 공격적 직장폐쇄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노조의 완전한 해체를 노리는 ‘노조 파괴’ 전략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탄압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조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라는 것이다.

2 발레오만도 :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민주노조 복원까지

1) 발레오만도 노조 파괴의 전개 과정과 노조의 대응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지역 초기업 연대의 핵심 역할을 하던 사업장이었으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을 계기로 민주노조 무력화의 대상이 됐다.

이곳의 노조 탄압은 국가 권력과 자본의 전방위적 협조 속에서 사전 기획된 대표적 사례다. 2009년 청와대 차원의 기획과 연관되어 검찰, 국정원 등이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측은 2010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300여 명의 용역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노동탄압의 유형별 특징

유형	핵심 개념	주요 특징	목적
노조 회피	노동조합 설립 방해 또는 기존 노조 무시	긍정적: 노동조합 불필요성 조성 부정적: 노동조합 결성 시 위협 또는 무시	무노조 상태 유지
노조 대체	기업노조(어용노조) 설립, 노동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 도입	기업노조, 직원 대표 위원회, 고충 처리 위원회 운영 등	노동조합 역할 대행 및 무력화
노조 억압	기존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불이익, 어용 노조 설립을 통한 노-노 대립 조성	노동조합 영향력 축소 및 통제
노조 파괴	노동조합의 완전한 해체 유도	조합원 집단 탈퇴 유도, 노조 활동 봉쇄	노동조합의 영구적 제거

축출했다.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이를 비호했고, 창조컨설팅의 조력 아래 어용노조 설립이 결의됐다. 이후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화장실 청소 등 굴욕적 잡무를 강요하고 경제적 차별을 가해 탈퇴를 유도했다.

하지만 지회는 법률 투쟁과 지역 연대로 맞서 2017년 해고자 전원 복직 판결을 얻어냈고, 14년 만인 2023년에 노조 통합을 달성했다. 최근 발레오 자본은 물리적 파괴 대신 무노조 사업장에 신규 투자를 집중하고 해외 물량을 역수입하는 저강도의 노조 대체 전략으로 전환했다.

2) 발레오만도 노조 파괴 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노조 파괴가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적 통제와 굴욕 등 장기적으로 공동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지속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리한 제도 속에서 연대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가 복원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사측이 산업전환이나 공급망 재편을 명목으로 물량을 재배치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은, 실질적 사용자의 지배력과 책임을 묻는 현재의 원청교섭 국면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3 유성기업 : 국가와 재벌이 공모한 총체적 폭력

1)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전개 과정과 노조의 대응

유성기업 사례는 약 10년간 자본과 국가 권력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노동을 탄압한 사건이다.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이 기획한 시나리오에 따라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 폭력이 시작됐다. 국가는 신속하게 경찰을 투입하고 노조를 비난하며 물리적, 문화적 폭력을 가했다. 이후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교섭에서 배제하고, 무분별한 징계와 수십억 원의 손배소송으로 구조적 폭력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일상적 괴롭힘은 결국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초래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기소를 수년간 지연시키며 공범 역할을 했다.

이에 유성기업 지회는 법률 투쟁과 현장 조직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맞섰고, 국면 전환 투쟁을 통해 회장의 구속과 2020년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2)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례의 의미

유성기업 사례는 약 10년간 자본과 국가 권력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노동을 탄압한 사건이다.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이 기획한 시나리오에 따라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 폭력이 시작됐다.

국가는 신속하게 경찰을 투입하고 노조를 비난하며 물리적, 문화적 폭력을 가했다. 이후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교섭에서 배제하고, 무분별한 징계와 수십억 원의 손해소송으로 구조적 폭력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일상적 괴롭힘은 결국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초래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기소를 수년간 지연시키며 공범 역할을 했다.

이에 유성기업 지회는 법률 투쟁과 현장 조직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맞섰고, 국면 전환 투쟁을 통해 회장의 구속과 2020년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2)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례의 의미

유성기업 사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원청과 하청, 국가가 연계된 폭력 구조를 드러내며 물리적 폭력이 어떻게 제도적 장기전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원청인 현대차가 노사관계를 직접 관리한 정황은 현재 원청교섭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논의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측은 노조를 소진시킬 시간을 얻는 반면, 노동조합에 시간은 생계 위협과 피로로 축적된다는 점을 선명히 입증한다. 이는 현재 노동부가 설계하는 절차 역시 권리를 소진시키는 노조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4 케이비오토텍 : 학습하고 변주되는 노조 파괴와 노조 대응의 진화

1) 케이비오토텍 노조 파괴의 전개 과정과 노조의 대응

케이비오토텍은 박근혜 정부 시기 자본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자동차부품사다. 회사를 자금줄로만 삼던 KBI그룹 측은 2014년부터 이른바 Q-P 전략이라는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탄압 및 투쟁 시기는 1~3기로 구분된다. 1기(2014.09.~2015.08.)에는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을 위장 채용해 폭력을 행사했으나 노조의 전면파업과 납품 지연 압박으로 사측은 용병 전원을 채용 취소했다.

2기(2015.10.~2016.09.)에는 사측이 전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지만, 노조의 여론전과 압박으로 공권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3기(2016.10.~2018.03.)에 노조는 투쟁이 장기화되자 기술적 유연성과 연대를 통해 사측을 압박했다. 결국 2018년 고용보장협약을 체결하며 노조 파괴 공세를 분쇄했다.

2) 케이비오토텍 노조 파괴 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노조 탄압이 고정된 매뉴얼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장 상황에 맞춰 학습되고 변주되는 전략임을 입증한다. 자본은 제도 변화에 대응 방식을 바꿔왔으며, 현재 노동부의 시행령은 이러한 사용자 전략의 자유도를 더욱 높여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또한 노조의 강력한 여론전과 정치적 문제 제기를 통해 국가와 사법기관이 사측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태도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5 아사히글라스 : 간접고용구조에서의 신속 파괴

1) 아사히글라스 노조 파괴의 전개 과정과 노조의 대응

무노조 상태였던 아사히글라스 간접고용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집단해고를 통한 신속 파괴형 탄압이 일어났다.

노조 결성 직후 원청은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여 178명을 문자 해고했다. 이후 9년이라는 지난한 기간 동안 행정 및 사법 절차가 지연됐다. 노조는 장기 사법화에 맞서 천막농성 등을 통한 '조직적 사법투쟁'을 전개하여 검찰의 기소를 끌어냈다. 이러한 성과가 누적되어 2024년 대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파견범위반 쟁점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2) 아사히글라스 노조 파괴 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간접고용구조에서 사측이 교섭이나 억압 단계를 건너뛰고 하청업체 도급계약 해지를 통해 조합원을 즉각적이고 집단적으로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은 책임을 부인하며 노사 분쟁을 사법 절차로 떠넘긴다. 한국의 사법 절차는 문제 해결을 장기화시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조합원 생계를 심각하게 소진시켰다. 이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법과 제도의 맹점을 명백히 드러낸다. 사법화는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을 주며, 노조 파괴는 신속하게 이뤄진다. 권리 회복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균형을 낳는다.

6 2010년대 노조 파괴의 특징과 제도적 기반

2010년대의 대대적인 노조 파괴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가능했다. 첫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민주노조를 소수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공됐다. 둘째, 노조 파괴가 컨설팅과 여론전이 결합된 하나의 전문적인 기획 프로젝트로 작동했다. 셋째,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고 폭력과 지연을 방조하며 노조 파괴를 지원하는 적극적 행위자였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은 2026년 현재 원청교섭 관련 시행령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또다시 제도적 배제와 지연에 직면할 위험성을 예고한다.

7 노조법 개정 이후, 노조 파괴 사례의 함의

당시 자본과 국가의 목표는 노동조건 향상을 이끌던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하여 공급망 전반의 생산체계 변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원청교섭 시행령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1) 절차와 시간의 정치 : 노동자 권리의 배제와 지연

과거 노조 파괴 사례들처럼 절차와 시간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면 제도는 권리를 박탈하는 도구가 된다. 노동부의 원청교섭 시행령과 매뉴얼 역시 이러한 절차와 시간의 정치를 통해 노동권을 지연시킬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다. 2010년대의 거대한 폭력에 맞서 민주노조가 복원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도 개정 노조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금속노조와 현장의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 노동부 원청교섭 시행령의 문제점

개정 노조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했지만,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기존의 교섭 절차 체계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 매뉴얼에 명시된 ‘하청집단단위설’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하청 집단 내에서 또다시 복잡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교섭의 문턱이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의 장기화는 자본에게 현장 통제와 친사용자 노조 육성 등을 시도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반면, 노동조합은 실제 교섭에 이르기 전에 모든 역량을 소진하게 만든다.

8 결론

세 가지 핵심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2010년대의 노조 파괴는 제도의 악용과 폭력, 국가의 편향이 결합된 구조적 공세였다. 둘째, 노동부의 원청교섭 시행령은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실현하기보다는 교섭을 가로막는 문지기 역할을 할 위험성이 높다. 셋째, 노동권이 절차와 시간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권을 독점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턱의 완화가 시급하다. 또한 아사히글라스 사례처럼 간접 고용 구조에서 벌어지는 신속한 파괴에 대응할 신속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국가기구, 자문 집단의 노조 파괴 조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노동법제도,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알아야 할 2026년 바뀌는 노동법



개정 노조법이 3월 10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박향주 선전홍보국장

최혜인 /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고 손해배상 책임 비율, 감면 청구권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가 전면 개정됐다. 3월 10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사용자 정의, 노동조합 정의, 노동쟁의 정의가 개정됐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를 구체화했

1) 사용자 정의(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정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다면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

용자 정의와 유사했으나, 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 당사자이자 부당노동행위 책임의 주체지만, 하청·도급·위탁 등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곤 했다.

그러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가 된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원청·도급·위탁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로 정의한다.

2) 노동조합 정의(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해당 단서 규정을 근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고자가 가입됐다며 노동조합 설립 취소 통보를 한 바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이미 구직 중인 자,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해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3) 노동쟁의 정의(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

쟁 상태도 노동쟁의로 정의됐다.

개정 전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정의 규정이 확대되면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청구 제한(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민사 면책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2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임금 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맞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처벌보다 권리구제가 우선이라고 해서 임금체불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거나 근로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인데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해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3 경력 보유 여성 등으로 용어 개정(여성경제활동법 제2조 제1호)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 단절 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간 동안 여성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보유 여성 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고 위해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 유예기간 종료(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2021.1.16.)된 바 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했으나, 당시 개정으로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하게 했다. 국가가 노동자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것.

또한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1.1.16.)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6일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 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5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623조, 제641조)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질식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식 사고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첫째,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 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제619조의2 제1항).

둘째,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록 한다(제619조의2 제4항).

셋째,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한다(제641조).

넷째,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이상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소방서장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감시인의 조치 사항(제623조 제2항)을 구체화했다.

6 이주노동자 무기한 구금 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개정(출입국관리법)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과는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23.3.23.자 2020헌가1 전원합의체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가 2025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한바, 이에 따른 개정이다.

첫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한다(제63조).

둘째,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제66조의4).

셋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제66조의

3)한다.

넷째,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개정,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추가됐다(제4조 제1항 제6호).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명문화 및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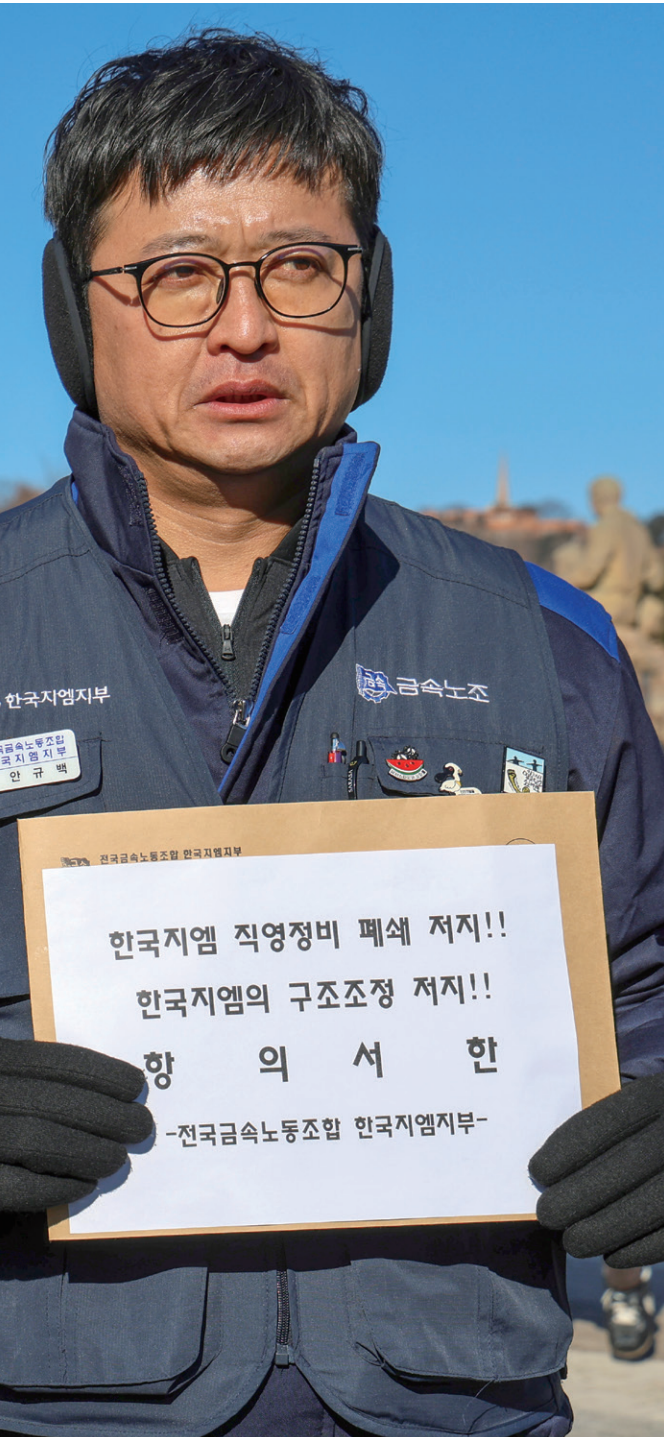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19조의5 제1항),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제19조의5 제3항)가 마련됐다.

또한 브로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 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제94조).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금속노조 이모조모

01





01 김용태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장과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이 1월 22일 청와대에 한국지엠 구조조정 규탄과 정부 역할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02 금속노조가 1월 5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있다.

03 금속노조가 1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노동부 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04 금속노조가 3월 3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과 요구안을 확정했다. 대의원들이 금속노조를 부르며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05 “원청교섭 쟁취하자” “노조법 2조 시행령 폐기하라” 금속노조가 2월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2026년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현장 풍물패 조합원들이 행진 대오 길잡이를 하고 있다.

06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3월 6일 오후 서울 종로 동십자각 인근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항주 선전홍보국장, 남지하 선전홍보부장, 이진희 선전홍보부장

에너지 체제 전환, 실용주의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과 대안적 접근 필요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전환 경로가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계획과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추진하려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은 법적 개념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에너지의 생산·전달·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 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과 환경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지나치게 단순하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기술적인 전환뿐 아니라, 에너지 이용의 의미 전환,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규범의 전환, 에너지 생산·소비의 공간적 배치전환, 생태환경과 건조 환경의 전환, ‘공공재생 에너지 및 공공협력’ 등 에너지 생산·공급의 소유·운영·관리 주체의

전환 같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따라서 에너지-사회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을 지향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과 실적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평가 역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기후 요인, 기후-산업정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경기 요인, 전원별 발전량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요인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의 소폭 감소는 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증가와 석탄 발전 감소에 기인한다. 산업 부문의 배출 총량은 여전히 경기 지표(성장률)와 연동되어 있고, 에너지 원단위($\text{toe}/\text{백만원}$)와 탄소집약도($\text{tCO}_2\text{eq}/\text{toe}$) 등 효율성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업종에서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2018년 대비 2030년 40%, 2035년 53~61%라는 정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 전 부문에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렸다. 이때 브라질노동총(CUT)이 주최한 '정의로운 전환과 한국의 경험' 간담회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한국 노동조합의 에너지 전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필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불확실성의 세계화

에너지 전환의 전개 과정을 준비, 단계, 가속, 안정의 4단계로 설명하곤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환의 질적, 양적 변화 양상을 묘사하는 차원에서 활용한다. 이런 서술적 단계 구분이 전환을 둘러싼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전환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환의 비전, 방향, 속도, 방법이 다양하고, 그만큼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제약과 대안적 역량에 따라, 그리고 의도적 행위와 외생적 변수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환 과정의 비선형성과 비결정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지와 반대라는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 따라 특정 전환 경로는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한다. 그 결과, 전환 경로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행사하는 군사주의를 겪으면서 세상은 전환 시대의 논리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총회(COP30) 결과는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021년 글래스고 기후 합의(COP26)는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했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 컨센서스(COP28)는 정의롭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온건한 표현이 추가됐다. 그러나 브라질 무치랑 결정문에는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이나 이와 유사한 어떤 표현도 모두 삭제됐다. 우여곡절 끝에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신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을 뿐이다.

극우 세력을 제외하면 중장기적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겠지만, 당면 대응 방안은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화석연료 인프라 구축 및 확대는 탄소 고착을 불러와 전환 동력을 약화하거나 전환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핵발전 확대로는 탄소중립 2030년 시간대의 변곡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재생에

너지와 충돌하면서 전력 시스템의 경직성이라는 불안 요소를 가중할 뿐이다.

“통합적 설계 등 전환적 공론화를 거쳐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선택적으로 취합한다. 실용주의적 에너지 전환은 공론화와 합리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 탈석탄,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환적 공론화가 아니라 도구적 공론화라는 비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자유 시장화라는 비판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지만, 당선 직후 도구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했다. 공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되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공론은 뒤집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의 신규 원전을 계속 추진한다. 한편, 상설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설치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기후 소송 판결(불합치)에 따라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포함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논점에 집중해 도구적 공론화를 전환적 공론화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속의 공론 자체에 내재하는 설계 쟁점과 함께 이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제도적 맥락, 위원회와 협의체 등 기존 거버넌스를 포괄하여 접근하는 통합적 설계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여론 분포를 확

인하고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주체와 공간을 형성하여 대안적 방식으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급진적 비전을 갖춰야 한다. 셋째, 올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스케일의 기후시민회의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여러 실험이 시도되었고 경험 성과도 일정하게 축적돼 있기 때문에, 토양이 척박하지 않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환 · 자립 필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생산·소비의 근접성과 인프라 규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소유·운영·관리 주체 등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 측면에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산 에너지는 물리적·기술적 공간성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공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재생 에너지는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적 기관의 능동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등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공공협력 모델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법(안)과 한국발전공사법(안)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다.

광주·전남 등 광역 행정통합특별법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권의 이론과 실천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과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 일련의 법제도 변화 속에서 에너지 전환·자립을 위한 지방분권보다는 자본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이 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배전·판매 단계에서 지배적 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배경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전환과의 불가분성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재정적·기술적 역량 확보의 원칙, 단계적·실험적 확대의 원칙, 중앙정부의 역할 조정 원칙,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원칙, 에너지 주민 자치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주민·공동체 참여 활성화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실천에도 주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분산 에너지의 비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자원과 전력 계통을 새롭게 통합하는 단계별 전력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도전 과제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기술 편향과 자본 편향을 초래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시도를 극복할 수 있다.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을 추구하면서 발전, 계통, 판매의 공공성을 유지·확대하자. 지방정부 및 지역에너지공사, 공동체에너지 및 사회적경제(협동조합)가 한국발전공사(발전공기업 통합)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는 공공재생 에너지의 지역 버전인 ‘지역 분산형 공공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말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향한 도전

공공재생 에너지의 지역 버전은 다음과 같은 ‘경남 공공 해상풍력-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경남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필요성: 2036년까지 10개 석탄발전소 폐쇄와 812명의 협력업체 노동자 일자리 상실 가능성. ② 경남의 해상풍력 잠재량 확인: 각종 보호지역 및 어업 영향 구역을 제외하면 6.3-12.6GW 규모. ③ 경남

의 해상풍력 공급망 잠재력: 터빈 및 하부구조물 등의 제조업과 설치·시공기업의 존재. ④ 경남의 공공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조건: 석탄발전소의 해상풍력 전환 지원,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 우대. ⑤ 경남 공공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공적 자원 마련 방안. ⑥ 경남 공공 해상풍력 2GW 개발을 통한 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지역사회 이익공유 등.**

이 구상은 공공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특정 지역에 적용한다. 특히 공공재생 에너지의 포괄적 범위를 건설과 제조 부문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민주주의 노조네트워크(TUED)가 제시하는 것처럼, ‘포괄적 탈환’은 공공 소유의 범위를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와 판매, 나아가 핵심 부품과 기술 공급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용주의에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 2030년까지의 미래가 결정된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용안정과 함께 탈석탄 노동 전환이라는 발전산업의 이중 과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라는 후속 절차만 합의했다. 앞으로 운영될 신설 협의체의 향방을 주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핵발전,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이슈를 반영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 수립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 ~~한~~

* 김철 외(2026),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 사회공공연구원.

** 이정필 외(2025), 「경남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해상풍력 확대 방안」, 공공운수노조·청소년기후행동.

“생명·건강 지키기 위해” 헝가리 삼성SDI 노동조합 출범

유럽 배터리 산업 폭스콘화 심각 ... 금속노조 역할 필요

류미경 / 민주노총 국제국장

헝가리 화학·에너지·일반노동조합연맹(VDSZ)가 삼성SDI 노조 결성을 알렸다. 공장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쪽 괴드(Göd) 공단에 있다.

헝가리 삼성SDI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유해 물질 관리 부실과 미신고 독성 가스 배출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사측은 즉각 노조 대의원을 개별 호출하고 퇴근하는 대의원을 붙잡아 노조 자료를 빼앗기 위해 몸수색까지 시도했다. 노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 결성 열흘 만에 조합원 100명을 넘겨 2월 27일 첫 공식 노사 교섭을 열었다.

주디스 키튼-달링 국제통합제조산별(IndustriALL) 유럽 사무총장은 “삼성SDI가 노조 파괴 행위를 벌일 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스트리올 유럽은 3월 23일부터 5일간 ‘유럽 배터리 공장 공동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배터리 기가팩토리 정문에서 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헝가리 정부, 보조금으로 배터리 공장 유치하고 노동권 방치

헝가리 정부는 보조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유치했다. 삼성SDI

괴드 공장에는 EU와 헝가리 정부 합산 2억 유로 가까운 보조금이 들어갔다. SK온 이반차 공장에는 헝가리 정부 단독으로 2억 9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에게 썩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헝가리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이른바 ‘노예법’을 도입해 연간 초과근로 최대 400시간을 합법화했다. SK온 이반차 공장은 전기차 시장 침체를 이유로 가동이 안정되기도 전에 600명 이상을 해고했다. 슬로바키아 코마르노에서 헝가리 SK온 코마롬 공장으로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실질 임금은 매달 줄어든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아시아 초국적 기업의 통제 아래 저임금·고유연 단순 조립 산업으로 전락하는 이 과정을 ‘폭스콘화’라 부른다. 초국적 기업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이윤을 챙기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며 바닥 임금의 유연 노동으로 내몰린다.

산업안전 보건사업을 기반으로, 단체교섭권 쟁취를 목표로

배터리 산업의 ‘폭스콘화’를 막아내기 위해 인터스트리올 유럽은 ‘EU 배터리 산업에 노동조합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략 조직화 사업을 개시했다. 2024년 9월 출범해 2025년 봄에는 세르비아·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순회하며 조직활동가 훈련을 진행했다. 그해 가을에는 기업 지배구조 분석 기법과 디지털 조직화 기술 등을 교육하며 조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단체교섭 쟁취를 위한 첫 번째 의제는 ‘산업안전보건’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 (Stronger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OSH) 캠페인을 공식 시작했다. 유럽의 배터리 역내 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가 리튬·코발트·니켈과 그 화학 화합물, 고전압 설비, 극단적인 작업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3월 유럽 배터리 공동 행동 주간에는 헝가리어·폴란드어·슬로바키아어·세르비아어·영어 5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릿을 유럽 각국 배터리 공장 정문에서 동시에 배포했다.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 범규의 완전한 준수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적정 교육 실시 ▲위험요소 사전 식별을 위한 작업장 점검 ▲안전 계획 전반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정기 건강 모니터링 시행 등을 요구했다.

배터리 공장 조직화에 기업지속가능성 입법지침(CSDDD) 활용

인더스트리얼 유럽은 2024년 7월 발효된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입법지침(CSDDD)’을 이 조직화 캠페인의 발판으로 삼았다. 대기업이 자사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침해를 식별·예방·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각국 국내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이 이 지침의 목표다. 유럽 노조들은 초국적 기업이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만 챙기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이 지침을 요구해 왔다. 원청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초의 제도적 교두보로, 유럽 노조들은 현장 조직화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 EU 회원국은 2028년 7월 26일까지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

해야 한다. 법 적용 시작일은 2029년 7월 26일이다.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초국적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2025년 6월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은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침해를 식별·예방·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노동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제정돼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유해 노동환경 방치를 막을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헝가리 괴드 공장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 노출에 맞서 지회를 세우고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헝가리의 삼성SDI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투쟁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



인더스트리얼 유럽이 지난해 9월 24일부터 3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세르비아 노조 간부들과 함께 ‘EU 배터리 산업에 노동조합의 힘’ 전략 조직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인더스트리얼 유럽

부자들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선거

“노동당은 독자적 진보 정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이백윤 / 노동당 공동대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
니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교체가
아니라, ‘반노동·반생태·돌봄결핍 사회’에서 ‘노동·생
태·돌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
하는 정치적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성장 지상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직면한 한국 사회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민들은 차별 없는 나라, 노동
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를 함께 외쳤
습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노
동자들이 목소리를 모았고, 그 힘은 정권교체라는 결
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으로 탄생한 이재
명 정부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주가 상승을 부르짖고,
대규모 반도체 산업을 국가경쟁력이라 포장하며, 불
로소득을 부추깁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
제로는 초광역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하
청·종속시키는 수도권·대기업·자산 소득자 중심의 ‘부
자 우선 성장’일 뿐입니다.

그 사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주거비는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하며, 불안정 노
동은 계속 늘어납니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고, 기후 재난은 가속화됩니다. 보수양당 모두 ‘성장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재벌 특혜를 유지하고, 자연
과 비수도권에 대한 수탈을 방치하며, 자산 기반의 부
의 세습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외침이
‘부자 우선 성장’으로 왜곡되는 지금, 지방선거야말로
이 구조적 불평등과 성장지상주의에 맞서 지역과 일
터,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기회입
니다.

지역사회와 우리 삶이 변하는 노동당의 정책과 실천

노동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추상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 정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존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공정 임대료제 도입, 주치의제
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돌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버
스 완전 공영제와 광역 프리패스 등 주거·의료·돌봄·
교통 분야에서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
다. 삶의 필수재가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
정부가 나서는 것입니다.

둘째, 평등한 삶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평등, 인권
조례를 제정해 성별·성정체성·장애·인종·나이·학력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금지·인권 상
담센터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지역에서 실현해
나갑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입니다. 기후정의 조례 제정,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공영주차장과 학교에 태양광 의무화 등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입각한 생태 사회로의 이행을 지역에서부터 추진합니다.

넷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입니다. 노동기본조례 제정, 생활임금 강화, 노동자 법률지원센터 설립, 지자체 책임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역에서부터 보장합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을 불안정 노동의 문제, 원하청구조의 모순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직시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의 강화입니다. 도정·시정 정보공개 의무화, 주민·노조·시민사회단체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주민조례 청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지역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위 다섯 가지 핵심 공약들은 각 지역의 개별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생태·돌봄 중심 사회로의 체제 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겠다는 노동당의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은 올해 1월 전국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기본 방침’을 채택하며 선거의 정치적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열어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후보 공천과 핵심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투쟁 현장과 거리 곳곳에서 노동당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독자적 진보 정치의 보루를 지키는 공동 행동

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독자적 진보 정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독식을 방관하는 것도 민주당의 자장 안으로 흡수되는 것도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인 요구를 지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독자적 진보 정치 세력들이 연대하여 급진정치의 존재감을 증명했던 경험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은 ‘무지개정치연대’를 통해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운동, 노동운동, 정치운동 세력 및 개인들과 함께 공동 정치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용 연합을 넘어, 윤석열 퇴진 광장의 요구를 계승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대중화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풍토를 조성하여 진보 진영 전체의 사회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보수 양당이 독점하는 지방 권력 구조에 균열을 내고, 노동자 민중의 사회권력을 강화하며, 지역에서부터 체제 전환의 전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선거에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숨통이 트이는 녹색정치로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자”

지역 주민 삶의 회복, 평등한 지역 발전 필요

이상현 / 녹색당 공동대표

이번 6.3 지방선거는 ‘숨통이 트이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광장에서 타올랐던 뜨거운 열기를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숨가쁜 ‘개발 속도전’ 속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내몰린다면 그것을 결코 ‘빛의 혁명’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은 보수 양당 가운데 어느 한쪽의 집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의 방향입니다.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는 성장주의 정책 드라이브와 정면 대결하며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합니다. ‘5극 3특’ 행정 통합 속도전, 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신공항과 신규 핵발전소 추진은 기후 생태 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 불평등을 확대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토건 중심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이자 대자본 이윤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성장과 개발주의에 맞서 생태적이고 평등한 지역사회의 대안을 확산하고, 당선자를 배

출해 지역사회 대안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탄소중립기본계획 대응, 공공교통 운동, 정책 제안, 정당 연설회 등 풀뿌리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지난해 12월 ‘녹색당 2026 지방선거 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성장 엔진이 아니라, 삶의 회복으로

녹색당은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생태적이고 평등한 지역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공주거입니다. 지자체의 책임으로 시민 맞춤형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새로 짓지 않고도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주택 임대료 제한과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 보장을 통해 기후 대응과 주거안정을 실현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 재생에너지’ 전략으로 공적 투자와 시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농촌 마을공동체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합니다.

셋째,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을 멈추는 무상공공교통 전환입니다. 교통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1만원 기후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무상공공버스를 확대해 요금 부담, 탄소 배출, 이동권 격차를 줄입니다. 또한 "자전거면 충분하다"는 원칙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생태교통 도시를 조성합니다.

넷째, 공공이 책임지는 건강한 농업 농촌 먹거리 체계입니다. 유기농법 전환 직불제(기후보상금)를 도입해 생태농업 전환을 지원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중심의 생태적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확대해 지역 농업과 주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지킵니다.

다섯째, 주민 주권과 지역순환경제로 지역의 힘을 키웁니다. 기후정의와 지역순환경제를 원칙으로 공공조달을 확대해 지역의 부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조직, 친환경 생산 기반을 함께 성장시킵니다.

여섯째,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해 평등권 보장을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여성성소수자 장애인청소년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뿌리 뽑고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합니다.

지역 정치 희망을 함께 싹틔웁시다!

이미 녹색당 후보들은 뜨겁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녹색도시 안동, 산불재난 회복'을 기치로 내건 허승규 후보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2022년 선거에서 18%를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불과 329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했던 허승규 후보는 그간 산불 대응 현장 등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왔고,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김유리 후보가 '녹색 편의점 같은 강서구 의원'을 내걸고 도전합니다. 주택 그린리모

델링 지원, 미니 태양광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강서형 안심 공공임대주택 등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통해 강서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김순애 후보가 '막개발을 막고 숨통을 트이는 녹색정치'를 내걸고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물 사용을 제한하여 제주 생명수를 지키고, 공공식당 도입과 버스 공영화를 통한 이동권 보장, 무엇보다 제주를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해 선두에서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양당의 부패한 성장주의 카르텔을 뿌리 뽑고, 풀뿌리에서부터 독자적 진보정치의 토대를 닦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본의 논리에 저항하며 노동 존엄을 위해 투쟁해온 동지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길을 열고 싶습니다.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대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



성장과 실용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을 향해!

“정의당이 사회 안전망과 평등한 지역 발전을 만듭니다”

권영국 / 정의당 대표

혹시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이런 말들 속에 우리 앞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정부식 ‘모두의 성장’이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믿고 계신가요?

정의당이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화려한 말과 숫자들,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의와 실용주의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을 봅니다.

달걀 한 판 8천 원인 현실이 무서워 주식에는 관심도 못 낸다는 청년. 주식 말곤 사다리가 없을 것 같아 영끌로 1억 투자금 빚낸 청년. 대출받아 창업했지만 이자 감당할 매출도 안 나와 폐업했다는 청년. 전세사기 피해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원양어선에 올랐다는 청년.

제 한 몸 누일 곳 없어 용산역 공터에 텐트 치고 살아가는 홈리스. 코로나19 때 생긴 빚 때문에 연체 늪에 빠진 소상공인. 자녀, 부모 이중 돌봄에 짓눌리는 4050. 고물가와 빈곤 속에 먹고살기 위해 2천 원짜리 쥐포를 흠치다 붙잡힌 노인.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당

기꺼이 그늘로 들어가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정당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생존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당, 우직하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용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성장주의와 실용주의는 제동 없이 독주할 것입니다. 그 끝에 그들은 더욱 짙어져서, 어느 순간 그곳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치가 대변해야 할 존재들, 그리고 진보 정치 자체의 명운이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는 비장함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실용의 독주에 의구심을 품는 유권자들, 평등과 존엄의 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당당한 선택지로 자리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평등과 존엄 정치로 불평등 정치에 종언을”

정의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겐 사회안전망을, 지역 주민들에게엔 평등한 발전을, 청년들에게엔 다시 도전할 힘을, 차별받는 이들에게엔 존엄을 주는 정치로 평가받겠

습니다. 무권리·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와 자가 없이 전월세를 떠도는 세입자, 죽어가는 소상공인과 희망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싸우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을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로 전락시키며 신규 원전과 대규모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 불평등 정치에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진작 청산됐어야 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것은 정치개혁 실패의 결과입니다. 국힘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양당 후보 하나씩 표 나눠 먹는 2인 선거구가 극우·내란세력의 동아줄입니다. 정의당은 단호한 정치개혁 의제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의 정초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돌봄이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각자도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시민의 돌봄 기본권을 보장하는 무상돌봄 시대를 열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우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와 결코 함께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지역에서부터 차별 금지가 원칙이 되어 여성과 성소수자가, 장애인, 이주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성장과 실용의 그늘을 걷어내고 진보 정치의 큰 미래로!

정의당은 진보 정치와 정의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광역단체장 최소 4곳 후보 출마와 기초자치단체장 최소 1곳 이상 출마, 모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주요 지역구에 실력 있는 후보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가는 중입니다. 적극적

인 출마 전략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진보 정치의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대선 때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독자적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시민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연대의 틀을 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또 당시 대선에서 금속노조 지지를 받은 것은 권영국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정의당에 있어 매우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한다”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권영국으로 모인 기대와 열정이 평등과 평화를 실현하는 체제 전환과 현장에 강하게 뿌리 내린 진보 정치로 뻗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지지 성명은 지금도 정의당의 자부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자랑스러운 금속 노동자들의 연대와 지지를 구합니다. 노동자 해방의 나라, 너나없이 평등한 나라, 진보 정치의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성장과 실용의 그늘을 함께 걷어냅니다. 🇰🇷



진보당이 진보 정치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겠습니다

“노동자가 지역과 행정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만들 것”

김재연 / 진보당 상임대표

6·3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1년 만에 진행되는 전국 선거입니다. 내란 사태를 겪은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4년마다 치루는 지역 권력 선출 선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내란을 청산하라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치 교체를 실현하고, 진보 정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당선’과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을 핵심 목표로 세웠습니다. 진보 집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원내 5석 정당으로 도약하여 진보 정치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정치를 만들어온 힘을 바탕으로 다수 지방의원 당선을 실현하고, 전국 3% 지지율 달성을 통해 진보 정치의 존재감을 키워나가려 합니다. 이에 울산 동구청장을 역임한 김종훈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로 나섰고, 저 김재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출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300여 명이 출마를 준비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진보당은 지난해 ‘모두를 위한 소유’라는 주제로 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해 온 불평등 해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불평등 해소 방식은 고소득층에게 조세를 부과해 마련한 재원을 취약 계층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세와 복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민 삶이 나아지려면 실질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비용은 줄어야 합니다. 생활 필수재인 공공서비스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서비스는 거대 자본의 손쉬운 수익원입니다. 독점적 소유권만으로 이익을 얻고, 그 자산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진보당은 ‘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이

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요 공공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히 시급한 ‘재생에너지, 공공버스, 공공은행, 공공돌봄, 공공주거, 공공생활폐기물 처리’ 등 6대 분야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정책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 중심의 지방정부 실현

진보당이 만들 지방정부는 노동자가 지역과 행정의 주인이 되는 노동 중심 지방정부입니다.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노동 중심의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 존중 도시를 선도해야 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초기업 교섭과 노정 교섭 강화, 민간 위탁 직영화,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울산 동구에서 시작했던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고졸 노동자 일자리 보장,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다양한 정책

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 역시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진보당은 ‘지역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지역 기반 산업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 임금 보장과 정주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정치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전체 후보의 56.7%가 여성 후보입니다. 진보당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청년 후보 40여 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합니다. 청년 기금을 조성하고 ‘2030 후보단 챌린저스’를 발족하는 등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장에서 터져 나온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보당은 여성과 청년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넓고 썩은 위헌적 정치제도, 같이엮는 수밖에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정치적 다양성’ 지켜야”

강남규 / '지금은 없는 시민' 저자

존중할 만한 봉쇄조항 취지, 현실은 극단적 양당제 보호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20년 7월 노동당과 녹색당, 진보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5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봉쇄조항, 즉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의석을 할당하지 않는 이 조항은 박정희 정부 시절 5%를 기준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3%로 완화되어 유지됐다. 지난 25년간 많은 군소정당이 봉쇄조항 앞에서 아깝게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다.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를 득표했지만, 의석을 얻지 못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군소정당은 3%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운한 결말을 맞이했다. 한국 정치제도는 원내 정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원내 정당의 자립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 2024년 총선에서 2.14%를 득표한 녹색정의당 역시 봉쇄조항이 없었다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가 2년만 일찍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극단주의 정당의 난립을 막는다는 봉쇄조항의 취지는 존중할 만하다. 전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조항을 도입한 것도 나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얘기가. 점점 더 많은 극단주의 세력이 봉쇄조항을 뚫고 권력을 획득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의 집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온다.

한국은 어떤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취지답게 극단주의의 난립을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은 기성 정당의 극단화다.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그 당의 지지자들조차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란범과 절연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 그 당 대표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줄줄이 제명되는 현재 국민의힘의 실태는 '극우 정당'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역설적으로 봉쇄조항과 같은 정치제도들이 거대 양당의 권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인지도 모른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대선에서 그 당의 후보가 41.15%를 득표하는 기형적 양당제 구도, 아무런 반성 없이도 영남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으로 원내 제2정당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선거 지형...

그러한 구도와 지형 속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고, 그렇다면 다수 국민이 아니라 당내 핵심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봉쇄조항은 극단주의 정당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양당제’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 정치에서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군소정당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결정문에도 잘 드러난다. 현재는 “(봉쇄조항은)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과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이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가치로 언급되고 있다.

군소정당이 이끌어 온 정치개혁, 가로막는 것은 늘 거대 양당

그간 한국의 정치개혁은 이처럼 군소정당이 주도했다. 예컨대 1인 2표제, 즉 비례대표 선거 또한 군소정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탄생했다. 2000년 당시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기존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 선거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위헌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는 기존 선거제도가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결정으로 2004년 총선에서 처음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민주노동당은 10석을 획득하며 진보정당의 짧은 전성기를 열었다.

2014년에는 정당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까지 쓰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에는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문에서도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위성정당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라며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양당 체제’를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과장하자면 지금 양당제를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당법·국회법·공직선거법 등 정치제도는, 아직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뿐 모두 위험적 소지를 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낡은 정치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바로 그 제도의 수혜자인 양당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못 박아도 제때 고쳐지지 않는 일들까지 빈번하다. 군소 정당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지만, 거대 양당은 일을 미룬다. 결국 바깥의 개입 없이 양당은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만이 남는다.

즉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유권자들이 이 현실에 죽비를 내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정치제도는 오래도록 낡은 채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정치의 극단화를 방조하는 정치제도를 이제는 정말로 끝장내자. 🗳️

나를 타협 없이 마주하는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다’

전주 ‘책방 토닥토닥’이 추천하는 책

김선경 / 책방 토닥토닥

2월 24일 저녁 ‘책방 토닥토닥’에서 최현숙 작가 북토크가 열렸다. 최현숙 작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다섯 평 남짓한 책방에 관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최현숙 작가를 모시면서 홍보 웹자보에 붙인 태그는 바로 ‘#70대퀴어노인’이다. 이날 모인 사람들이 용감한 70대 퀴어 노인 최현숙에게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양하다. 어떻게 나답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늙어가는 내똥을 당황하지 않고 의연히 마주할 수 있는지.... 많은 질문과 공감이 오고 갔다.

북토크는 최근 나온 최현숙 산문집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작가는 ‘나는 도둑년이었다’로 자신을 고발하고 액취증을 자백한다. 최현숙은 자신의 인생을 놀랍도록 솔직하게, 또 제삼자 시선으로 냉정하게 관찰한다.

이 책에 실은 글들 중 한 부류는 지금 혼돈하고 아파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에게 건네는 먼저 늙어가는 사람의 말이다. 다 른 한 부류는 노년 역시 살아볼 만한 시절이 니 오는 대로 살아보자는 말이다. 쓸데없는 소 문에 속아 노년을 대비하느라 젊은 시절을 종 종거리지 말고, ‘지금 여기’의 자기 자신으로 살 아가면 된다. 모든 생명이 결국은 늙어 죽는데, 나 하나 나이들어 늙고 죽는 게 두려울 게 뭐 란 말인가. 끝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위 안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소식에 내 죽음을 떠올리며, 남은 삶에 더 자유롭게 충실해지기를 욕망한다...7p (프롤로그 중)

그녀는 현재 홈리스 현장에서 활동가로 살아간 다. 다양한 사회적 계급의 시선 아래에 있는 최현 숙의 몸은 모든 혐오를 관통한다. 액취증을 겪는 몸, 여자라는 몸, 이혼하고 여자와 사는 몸, 늙어 가는 몸, 이빨이 빠지고 틀니를 하는 몸, 집이 없 는 몸...

이런 일들은 누군가에겐 겪고 싶지 않은 두려 움일지도 모르겠으나 모든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 는 최현숙은 그런 두려움은 모두 헛소리라고, 겪 어보고 느껴보고 경험하면 그 말들이 얼마나 우

스운지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 소문에 휘둘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답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칠십 인생을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몸을 모든 사회적 외피와 사회적 형식에 맞게 구겨 넣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준다.

어쩐 우리는 바로 그런 말이 듣고 싶어 그날 토닥토닥에 모였을 테다. 나도 당신처럼 나의 남사스러움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 당돌한 쿼어 노인의 고백을 들으며 어찌면 자유를 향해 돌진해 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모든 '비정상'에는 우울과 분노, 도발과 저항이 뒤엉킨다. 샷대를 단단히 쥐고 마음과 삶의 향방을 최대한 주도할 일이다. 불온함과 변태야말로, 돈과 가족이 최고라는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재난을 즐겁게 통과하고 다음 재난을 맞이할 힘을 키우는 잉여들의 가오다. 불온함이란 사상이나 태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향을 말한다. 진정한 인간의 길은 불온한 잉여들이 만들어낸다. 하염없이 희망없이, 때론 전략적으로 좀 쉬면서, 우리들의 놀이판을 벌이며 싸우자. 즐겁게 놀며 싸우는 것이 사는 맛 중 최고임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 끝에 죽음을 만나거나 적당한 때에 죽음을 집어들면 된다._355p

올해 아홉 살이 된 책방 토닥토닥이 헤쳐온 여정을 돌아켜보니 그녀의 삶처럼 몹시 울퉁불퉁하다. 그동안 한 곳에서 구르고 버텼다. 여타 서점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토닥토닥 책방지기들은

책방을 지키는 자영업자이면서도 이곳저곳 수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다양한 정치적 의제를 책으로 안내하고 외부에 연대하는 활동 또한 멈추지 않으며 이 자리를 지켜왔다.

예민한 의제들에 침묵하지 않고 선명한 자기주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어찌면 최현숙 작가의 말처럼 그런 활동들이 즐거웠기 때문이리라. 연대하며 책을 읽는 맛이 그 어떤 인생보다 짜릿하고 행복하다. 그가 기어코 아래로 기어 내려가 그들과 몸을 부대끼며 손을 맞잡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내일도 꿈도 희망도 없이 늘 위험하고 불온하며 지금 당장의 불행과 다행만으로 삶이 이어지고 끊어지는 노숙인의 공간'은 마치 꼭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인간의 맨몸뚱아리 같다. 책방도 그렇게 민낯의 맨얼굴을 하고 희망없이, 하염없이, 속절없이 이 자리에 있고자 한다. 그 자리가 주는 자유의 맛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



최현숙 작가 북토크. 사진=책방토닥토닥

책방 토닥토닥 인스타그램 @todakbook

전주 완산구 풍남문2길 53 남부시장청년몰 2층

거리의 시민들을 노래로 기록하고 위로하다

예람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가수 예람이 2025년 1월 25일 열린 '8차 범시민 대행진 민주주의 수호 평화 행진'에서 자작곡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를 부르고 있다. 사진=비상행동 허란

였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평등을 꿈꾸는 민(民)이라면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시간 아니었던가. 날마다 뉴스만 주시하며 대체 언제 윤석열이 잡혀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지 목이 빠지라 기다리던 시간 아니었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하고, 거대 야당이 이렇게 순식간에 극우로 돌변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그 충격만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날들이었다. 세상이 조용돌이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 작품은 사건과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

서정민갑 / 대중음악의견가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후 우리는 정의감과 소명 의식을 가진 음악가를 많이 만났다. 제대로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엄동설한의 야외무대로 달려와 노래하고 연주한 이들과 광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투쟁은 리듬을 탔고, 눈부신 스펙터클을 만들 수 있었다. 어떤 음악가는 그 순간을 노래로 기록해 2024년 12월 3일 이후의 시간을 영원히 되새길 수 있게 했다.

사실 음악을 만들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세상이 어찌 되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심히 지낼 수 있

2024년 12월 3일 이후 광장과 응원봉과 분노와 간절함에 대해 노래하는 곡이 특별하고 소중한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더군다나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2025년 1월쯤 만든 노래라면 더더욱 그렇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말 집회를 이어가던 1월 25일 토요일 '8차 범시민 대행진 민주주의 수호 평화 행진'에서 공연하기 위해 리허설을 하던 싱어송라이터 예람은 원래 부르려 했던 곡 대신 새로 만든 노래를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다. 바로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였다.

예람은 이 노래를 혼자 기타 치면서 불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수많은 연대 공연과 콘서트 등으로 단

련된 예람은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음악가였다. 특히 질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고민하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펄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는,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 몫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의 좌절과 슬픔을 대변했다. 노동자, 청년, 빈민, 여성,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이들의 서러움이 배어있는 목소리는 슬픔의 힘으로 위로했다. 슬픔의 힘으로 연대했으며, 슬픔의 힘으로 전진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진 성주 소성리에서, 건물주의 횡포와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가게를 비워야 하는 현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거리에서 예람의 노래가 벽찬 울림을 만들어낸 비결이다.

예람이 처음 선보인 노래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에는 12월 3일 그날 밤 국회 앞으로 달려왔던 이들의 긴장이 그대로 드러난다. 늘 집회에 나오던 이들만이 아니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날부터 국회 앞으로, 남태령으로, 또 각자의 지역 거점으로 달려 나온 평범한 시민들의 두려움과 펄림, 분노와 열망이 반복하는 노랫말 갈피마다 배어있다.


무엇보다 예람은 처음에는 여럿이 함께 부르지 않고 혼자 부르는 방식으로 그때 거리에 선 누군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호출한다. 떨며 혼자 거리로 나왔지만 거리로 달려 나온 다른 개인을 만나 감격하고 의지했던 순간을 포착하듯 예람은 차츰 악기를 더하고 목소리를 겹치면서 광장의 드라마와 스펙터클에 육박한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고 조직과 개인이 만나며 존재를 확인하고 안심했던 그 겨울의 감격이 이 노래 한 곡에 다큐멘터리처럼 담겨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으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새벽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라고 예언하는 노래는 그 겨울의 추위를 낭만적으로 표현할 생각이 없고, 응원봉을 든 이들을 신

화화하려는 욕심 역시 없다. 오직 두려워서 진심이었고 분노해서 간절했으며 거리여서 순정했던 이들이 만나고 행진하며 만들어내는 역동을 담아내는 데 집중할 뿐이다. 민주주의가 이길 거라고, 잘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안개 같고 미로 같은 상황에서 예람은 거리에 함께 있는 우리 자신을 응시하고 믿는다.

그는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라는 노랫말을 반복하면서 그 소리에 깃든 간절함과 다양함과 뜨거움을 확인한다. 그 안에서 “새벽의 열쇠”와 “새날의 깃발”과 “새벽의 총성”과 “새벽의 바다”와 “새벽의 길목”과 “새벽의 빗물”과 “새벽의 눈길”을 찾아낸다.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낸 기세와 낙관은 결국 “노랫소리 울려 퍼져라”라는 노랫말의 합창이 직조한 감동적인 순간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끝난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사람인가, 시대인가. 대부분 음악은 예술가가 만드는 거라 믿지만 사실 여성이거나 계급이 낮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악을 만들 기회를 한정하는 사회가 있지 않나. 게다가 지금처럼 수많은 악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음악이 한 예술가의 번득이는 창조성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그 시대의 본질과 모순을 찾아내는 예술가, 그 현장을 기록하는 예술가가 분명히 있다. 고통받는 이들, 싸우는 이들 곁에서는 음악가가 있다. 어떤 음악은 용기와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만들지 못한다. 역시나 음악을 만드는 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를 만든 사람은 싱어송라이터 예람이다. 



예람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외눈박이·깜깜이? 보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착각

“차별 언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장슬기 / 미디어오늘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는 보수 진영 인사를 잘못 발탁했다가 말 그대로 혼이 났다.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눈물까지 보여 가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의 표현을 뱉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 보좌진을 향한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는 청문위원들의 질타까지 쏟아졌지만, 이 후보자는 버텼다.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함께 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보좌진에게 폭언한 사실을 반성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외눈박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썼다. 풀이하면 ‘의원으로서 성과, 보좌진에게 예의를 차리는 일 두 가지를 모두 유념해야 했는데 후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뜻이다. ‘외눈박이’는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 눈이 두 개인 사람보다 부족한 거란 전제가 깔린 표현이다. 전형적인 장애 차별이다.

‘외눈박이’는 관련 판례도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20년 6월 SNS에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

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 편향됐다고 말하기 위해 ‘외눈박이’로 비유한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낮설다고 ‘가상 개체’로 취급하는 무례함

곽 전 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눈박이’는 자연 상태에서 1만 6천분의 1 확률로 발생하는 기형으로 한쪽 눈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가상 개체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쉽게 볼 수 없는 존재를 ‘가상 개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발상은 곱씹어볼 만하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장애인을 별개의 생명체, 심지어 ‘가상 개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사회 인식이 장애인을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법원은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외눈박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외눈박이’는 왜곡됐거나 편파·편향적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논란의 소지도 줄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체한 표현이 훨씬 더 정확

한 언어이기도 하다. 눈이 두 개여야 하는데 한 개밖에 없어서 어떤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외눈박이’가 법원에서조차 지적할 만한 차별 표현이라면 ‘깜깜이’ 역시 마찬가지다.

‘깜깜이’는 꽤 널리 쓰이는 차별 표현이다. 외부에서 볼 수 없어 불투명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 ‘깜깜이 회계’, ‘깜깜이 매각’와 같은 표현은 언론계, 정치권, 노동계 등에서 자주 쓴다.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깜깜이 감염’, ‘깜깜이 환자’라고 썼다. ‘깜깜이’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감염 경로 불명’ 등으로 바꿔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깜깜이 심사’, ‘깜깜이 선거’ 등 다양한 곳에서 ‘깜깜이’ 표현을 사용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언론은 장애 차별적 표현을 의식 없이 보도하고, 주요 정치인들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할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닌 단순 중계식 보도로 저널리즘 가치를 외면한 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때 문제 삼은 표현 중에 ‘깜깜이’, ‘절름발이 행정’, ‘눈먼 돈’ 등이 있다.

장애를 부정적인 상황에 비유하지 말아야

일각에선 ‘깜깜이’가 형용사 ‘깜깜하다’를 명사화한 표현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반박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과 무관하게 부동산 업계에서 ‘깜깜이 청약’이라고 쓰다가 다른 분야로 확산했다는 설명도 있다.

‘깜깜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시각장애인에 빗댄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어 기원이나 유래를 들어 굳이 이 단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장애

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발표한 <장애 관련 올바른 가이드라인(2019)>에 따르면 ‘깜깜이’는 ‘확인 불가능’, ‘알 수 없는’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처럼 차별 표현을 몇 가지 지적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박에 마주한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극히 소수만 누리던 권리다. 많은 사람이 차별 표현을 듣고도 참았을 뿐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기존의 언어를 지적하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 등으로 팔이 잘린 사람에겐 ‘반팔티’란 표현이 불편할 수 있다. 반팔티 대신 ‘반소매티’로 대체해 쓰면 어떨까. 소매가 반이지 팔이 반은 아니지 않나. 장애를 굳이 부정적인 상황에 비유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아보자. 🗣️



“함께 맞는 비가 진짜 연대”

한국지엠지부 현장 노래패 ‘참소리’를 만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노래패 ‘참소리’ 패원들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문화패 공간’에 모여 투쟁가를 연습하고 있다. 사진=이진희 선전홍보부장

〈현장을 올리는 사람들〉은 집회, 파업, 투쟁의 한복판에서 노동을 노래하고 몸으로 말해온 현장 문화패와 문화 활동가들을 만나는 기획이다. 〈금속노동자〉 매호마다 인터뷰 연재를 심는다. [편집자주]

남지하 / 금속노조 선전홍보부장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나 되어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노래로 빚어온 사람들이 있다. 한국지엠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함께 활동하고자 지부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지엠현장노래패로 활동한다. ‘옳고 바른 소리, 정확한 주장’이라

는 뜻처럼 여러 부침 속에서도 노래패 ‘참소리’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노조의 가치와 연대를 노래해 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만드는 화음

한국지엠지부 현장노래패 ‘참소리’의 역사는 1989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자투쟁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왕성한 활동을 했다. 90년대 후반에는 패원들이 직접 녹음한 노동가요 CD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공장 내외의 투쟁에서 문화로 선전선동을 한 경험들은 많은 간부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다. 3년의 복직 투쟁 끝에 현장에 복귀했지만 서슬퍼런 회사의 탄압에 조합원들은 한껏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둘 노래패를 떠나가던 시기에도 김경태 패원은 2년 동안 홀로 참소리를 지켰다. 그런 묵묵함으로 버티니 하나 둘 패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참소리의 가장 특별한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나의 패를 운영하며 노래패 안에서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를 실천한다. 이런 정서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연대활동으로 이어졌다. 불법과건 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투쟁, GM부품물류지회 투쟁 등 작년만 해도 연대 문선이 끊임이 없었다.

현장의 '참' 소리를 잇고, 참소리의 맥박을 지키다

김경태 패원은 1993년에 입사해 97년경 활동을 시작한 참소리의 산증인이다. 그는 과거 식당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던 선배들 모습에 반해 제 발로 노래패를 찾았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선배들이 떠나고 약 2년 동안 혼자 패를 지켜야 했던 시기였다. 그는 "이름조차 잊힐 뻔했던 참소리가 다시 활성화되어 다행"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담백한 목소리로 '민들레처럼' 같은 조용한 노래를 즐겨 부른다. 이제는 패의 최고참으로 신입 패원들을 챙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비정규직의 아픔, 함께 맞는 비로 씻어내다

2015년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한 김영웅 패장은 투쟁 현장에서 참소리를 만났다. 그는 연대 투쟁을 다녀오던 버스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를 부르다 캐스팅되었다.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정문 앞 단식 농성장에서 만든 노래다. 비가 쏟아지는 문화제 현장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대신 끝까지 곁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던 동지들의 눈빛을 그는 잊지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비를 맞는다>이다.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 또다른 '나'들, 함께 비를 맞으며 자리를 지킨다 삶을 외친다.
이 싸움의 끝은 승리란 걸 알기에, 차오르는 울컥함은 동지애란 걸 알기에 오늘 하루도 버틴다.*

재능이 아니라 마음으로 달는 첫걸음

2006년에 입사한 진종남 패원은 집회 현장에서 가사를 몰라 입만 뻥긋거리는 것이 창피해 노래를 시작했다. 부품 박스 라벨지에 가사를 적어 작업대 앞에 붙여놓고 외우던 그의 열정은 참소리에서 꽃을 피웠다.

그는 자신을 "반백이 넘어 가사 압박에 시달리는 알토 파트"라고 유쾌하게 소개했지만, 노동 문화 보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지하다. "누구나 민중가요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는 진종남 패원은, 참소리가 단순히 노래 실력을 뽐내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자아를 발견하는 공간이 되길 꿈꾼다. 노래패 활동의 경험은 오랜 기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양분이 됐다.

무대 위의 저항, 노동 탄압에 맞서 곡을 세우다

2022년 정규직 전환 후 참소리에 합류한 변진한 패원

은 비정규직 때부터 문화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마이크에 대한 거부감 없이 활동가로서의 삶을 노래와 함께 이어가고 있다. 대학 시절 노래패 활동 경험이 있던 그는 무대에 대한 거부감 없이 참소리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

특히 그는 2023년 겨울,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인천 지역 연합 노래패와 함께 준비했던 집체극 ‘탈환’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꼽는다. 단순한 노래를 넘어 몸짓과 연기로 노동자의 저항을 담아냈던 그 시간은 그에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뿌듯함을 선물했다. 작년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투쟁 발언을 하기도 한 변 패원은 현재 투쟁과 문화활동에 앞장서는 정의문화부장을 맡고 있다. 투쟁과 문화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문화로 연대하고 투쟁의 기운을 주다

군산공장 비정규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이완규 패원

은 해고 당시 결의대회나 문화제에서 노래로 연대하는 문화 노동자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노래패로 활동했던 동지의 권유와 “나도 힘있게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문선으로 연대하고 투쟁의 기운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참소리’ 패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우산 대신 함께 비를 맞자” … 현장에서 길어 올린 선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패로 활동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이러한 연대 정신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투쟁사업장을 향한 연대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소리’는 3월 3일 열린 금속노조 6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문화패 최초로 ‘연대투쟁상’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 ‘찾아가는 투쟁 문화제’를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자 했다. 그 도전의 첫걸음이 바로 집체극이었다. 직접 대본을 쓰고 동선 하나하나를 고민하며 극을 준비했



한국지엠지부 노래패 ‘참소리’가 지난해 4월 30일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열린 ‘모두의 노조할 권리 4.30 투쟁 문화제’에서 공연하고 있다. 사진=박향주 선전홍보국장



앞줄 왼쪽부터 김영웅 패장, 진종남 패원. 뒷줄 왼쪽부터 변진한, 김경태 패원. 사진=남지하 선전홍보부장

던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우리만의 무대”를 또 한 번 올려 보고자 하는 각오로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

참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대표곡으로 ‘자, 가자’를 꼽았다. 이 곡은 특히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가자”라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며, 어떤 현장에서든 참소리의 진심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곡이라고 강조했다.

진종남 패원은 “민중가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조 차원의 보급 사업이 절실하다”며 노동 문화의 확산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과거 대학교 운동장에서 밤새 진행되던 ‘전야제’ 같은 뜨거운 축제 문화가 사라지고, 갈수록 개인화되는 현장 정서 속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숙제다.

참소리 패원들은 노래를 잘하는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이곳을 “재능을 발견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두려워하는 동지들에게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라고 손을 내민다.

참소리 패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노래패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함께 활동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가는 곳이라고 말이다.

활동이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참소리 패원들은 연습 공간을 유지하고, 공연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참소리는 그럴수록 외부 투쟁 현장으로 눈을 돌려 연대의 폭을 넓혔다.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 집회 현장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투쟁하는 동지들의 굵은 등을 노래로 펴주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임을 알기 때문이다.

“노래할 때 조합원들이 고개를 들고 박수를 쳐줄 때, ‘한 번 더’를 외쳐줄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이 노래가 현장의 온기를 지키는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소리는 현장의 요구가 있다면 곧바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다. 그들의 노래는 차가운 기계 소리를 뚫고, 현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

‘노동조합을 노동자답게’ 대전충북지부 H그린파워지회

“금속노조로 뭉쳐 안전과 건강 함께 지킵시다”



한건희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국장

충북 충주 H그린파워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H그린파워는 현대모비스 자회사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 배터리 부품을 만든다. 담당 너머 유니투스 충주공장이 있다.

H그린파워에는 기업노조가 있다. 현장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재해가 생겨도 나서질 않는다. 노동조합이 뭐 이래? 기존 노동조합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H그린파워지회를 설립했다.

소수노조 입장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무척 높은 벽이다. 쉽게 허물어지지도 않는다. 법제도 상 소수노조에 복잡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민주노조 활동 방해 목적으로 악용되기 일쑤다.

H그린파워도 다르지 않다. H그린파워지회가 사용자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다수노조를 통하라며 거부 의사를 알려 왔다. 단체교섭 요구도 아니고, 다수노조 핑계 대며 노사 면담조차 거부하다니!

노골적으로 금속노조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사측은 H그린파워지회가 공장 내 설치한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가 하면, 사내 선전전 진행과 집회 개최도 막아선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안다. 사측은 금속노조를 두려워한다.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금속노조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금속노조를 경계한다. 금속노조 힘을 알기 때문 아닐까.

특히 현장 안전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인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조금만 빼끗해도 사고가 난다. 금속노조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현장 만드는 일을 중시하고,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주력한다. H그린파워지회 역시 현장 안전 개선 활동에 힘을 쏟는다. 위험 상황이 생기거나 의심되고 안전 문제에 관한 현장 제보가 있으면, 꼼꼼히 확인하고 사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모비스지회들의 투쟁 결과만 받아먹고 현장 안전 문제조차 방치하는 노동조합은 존재 이유가 없다. 안타깝게도 아직 금속노조 숫자가 부족하다.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 지회는 현장에서 월 3~5회 선전전을 꾸준히 열어 “금속노조 가입해 노동자 권리를 찾자”고 외친다. 노동조합을 노동자답게! 금속노조로 더 크게 뭉쳐, 더 크게 우리 목소리를 낼 것이다. 🗣️

노동절 삼행시 공모

예

미 여러분!

대 지나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

제시어

노 동 절

- 접수기간 - 2026. 3. 23. ~ 4. 23.
- 접수 방법 - QR코드/첨부링크 접속
- 결과발표 - 2026. 4. 27.
- 20명 선정 - 민주노총 굿즈세트 증정 영상으로 제작



←삼행시 공모전 참여하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금속노조

금속노조와 함께하면
열린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난다 진짜 사장
커진다 노동자 권리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 어디서나
1811-9509